

통일의식조사 20년.
멀어진 통일의 꿈,
익숙해진 분단 현실

2026 통일의식조사 결과발표회

일시 | 2026년 9월 29일 (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4층 국제회의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 1부 기초분석

발표1 통일인식	01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발표2 북한인식	15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발표3 북한이탈주민인식	25
신혜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 센터장	
발표4 대북정책인식	35
윤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5 주변국인식	47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제 2부 심화분석

발표1 2026년 지방선거와 통일북한인식	63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표2 북한의 국가성과 한반도 두 국가론 인식	75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 론 이선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85
김필국 MBC 논설위원	

제 3부 종합토론

토 론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초대원장	89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김민서 조선일보 기자	



제 1부 기초분석

발표1. 통일인식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2026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인식 (요약)

김범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자유전공학부 교수)

1.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39.0%로 2025년(41.1%)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32.2%로 2025년(30.4%)에 비해 소폭 상승함
- 그러나 조사를 시작한 2007년과 비교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007년 63.8%에서 지속적 하락세이며,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2007년 15.1%에서 지속적 상승세임
- 통일이 '필요하다' 39.0%는 2024년 36.9%에 이어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 32.2%는 2024년 35.0%에 이어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 20대(19~29세)와 30대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25.2%와 27.0%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44.8%와 47.0%에 달함

2.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는 응답 비중은 4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남북이 사실상 2개 국가로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분단 선호 비중 또한 31.5%에 달함
-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분단 선호 비중은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로 상승함
-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을 합할 경우 각각 과반이 넘는 55.1%와 55.9%를 차지

3. 통일은 '불가능하다'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통일이 '불가능하다'라는 응답이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수준인 39.1%로 상승하였으며, '30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27.5%에 달함
- 통일이 '불가능하다'와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을 합하면 66.6%로 이는 응답자의 약 2/3가 통일이 30년 이내에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30년 이내'는 모두 포함하여 33.4%에 불과함

4. 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는가?

- ▶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29.8%가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29.1%가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꼽고 있음
- 경제적 부담을 선택한 비중이 다소 줄어 들었으나 전체적인 추세는 예년과 유사하게 유지됨

▶ 사회문제 악화 우려

- 또한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통일이 이념갈등, 범죄문제, 지역갈등, 빈부격차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음

▶ 기대 이익 하락

-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 합해 54.0%인 반면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 또한 46.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9.2%인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0.8%에 달함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개선, 군사적 긴장 해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의 순서로 인식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현체제 유지'라고 응답한 비중은 51.7%로 2024년의 48.6%에서 소폭 상승

6. 결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대북 '피로감'↑ 반영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남북 경색 국면이 계속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널리 퍼지면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시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보임
- 2007년 이후 지난 약 20년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 비중은 2007년 63.8%에서 2026년 39.0%로 감소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중은 15.1%에서 32.2%로 상승함
-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분단 선호 추세도 2007년 11.8%에서 2026년 31.5%로 상승함
-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추세도 2007년 13.3%에서 2026년 39.1%로 상승함
-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2026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인식

김범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주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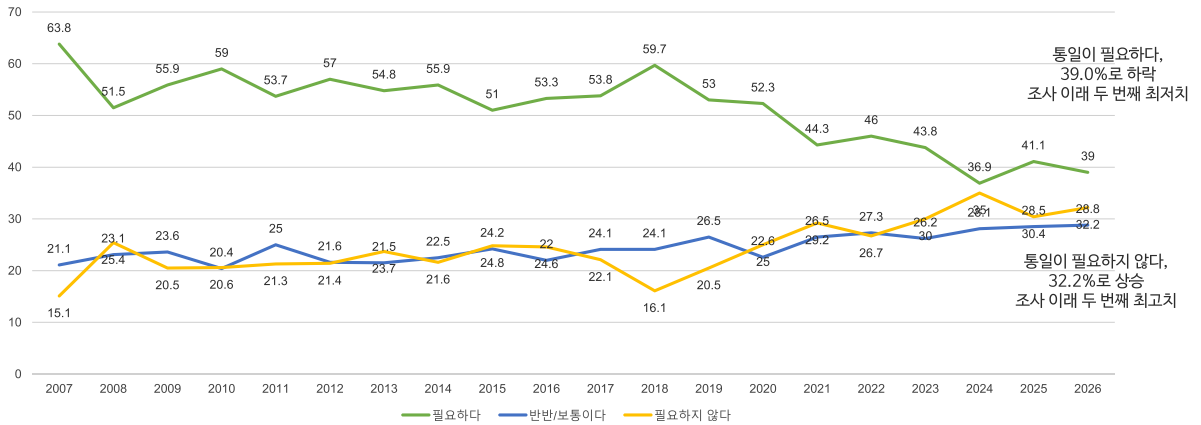
💡 2026년 조사의 주요 특징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다시 하락세로 반전함
 -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39.0%로 2025년(41.1%)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32.2%로 2025년(30.4%)에 비해 소폭 상승함
 - 20대(19~29세)와 30대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25.2%와 27.0%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44.8%와 47.0%에 달함
-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현재대로가 좋다’는 분단 선호 응답과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조사 이래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중은 42.7%로 2026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고,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비중은 31.1%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로 상승함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3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과 ‘불가능하다’는 응답 비중은 각각 27.5%와 39.1%로 둘을 합할 경우 66.6%에 달함
 - 특히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2007년 조사 이래 최고치로 상승함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 통일의 필요성 정치성향별 응답 비율(필요하다: 진보 > 보수)

정치적 성향	매우 +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21	'22	'23	'24	'25	'26	'20	'21	'22	'23	'24	'25	'26	'20	'21	'22	'23	'24	'25	'26
진보적	65.6	51.8	47.9	42.8	39.2	51.1	45.9	16.7	24.5	26.5	25.8	23.5	25.5	27.3	17.7	23.7	25.6	31.4	37.3	23.3	26.9
중도	47.0	42.2	43.7	44.1	33.6	36.4	34.3	27.5	28.4	29.8	25.7	29.7	31.3	31.4	25.5	29.5	26.5	30.2	36.8	32.4	34.3
보수적	43.4	40.6	48.3	44.0	42.6	35.0	40.0	21.5	25.2	23.5	27.8	29.4	28.1	25.1	35.0	34.3	28.2	28.2	28.0	36.9	34.9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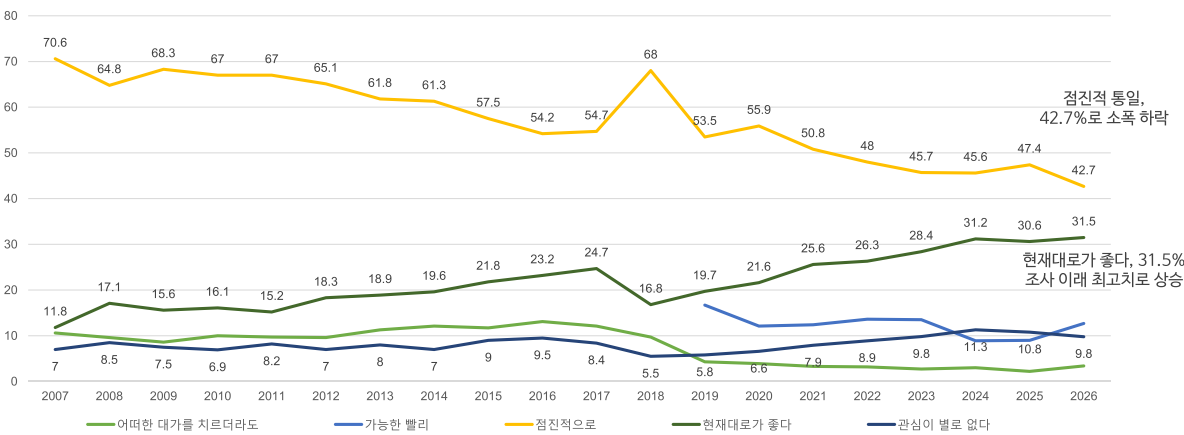
• 통일의 필요성 세대별 응답 비율(필요하지 않다: 20대 44.8%, 30대 47.0%)

연령대	매우 + 약간 필요하다							반반/ 그저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 전혀 필요하지 않다						
	'20	'21	'22	'23	'24	'25	'26	'20	'21	'22	'23	'24	'25	'26	'20	'21	'22	'23	'24	'25	'26
19~29세	33.9	28.0	27.8	27.8	22.4	24.4	25.2	29.3	29.2	32.5	29.1	30.2	24.9	30.0	36.7	42.8	39.7	43.1	47.4	50.7	44.8
30대	43.0	41.2	33.9	34.0	23.9	30.4	27.0	25.6	25.5	33.8	30.9	31.1	34.3	26.0	31.4	33.3	32.3	35.1	45.0	35.3	47.0
40대	57.3	45.5	50.3	43.1	36.9	39.0	39.1	22.5	30.3	24.3	25.5	27.6	30.9	32.6	20.2	24.2	25.5	31.3	35.5	30.1	28.3
50대	62.5	46.5	50.4	52.5	43.6	45.2	44.4	18.6	26.7	30.3	22.3	29.8	31.4	28.5	19.0	26.8	19.2	25.3	26.6	23.4	27.2
60대 이상	61.4	57.0	61.2	54.8	49.0	55.9	50.0	18.5	21.6	18.4	24.9	23.8	23.0	27.5	20.1	21.4	20.4	20.3	27.2	21.1	22.6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견해

•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점진적 통일 but ...



통일의식조사

통일에 대한 견해 세대별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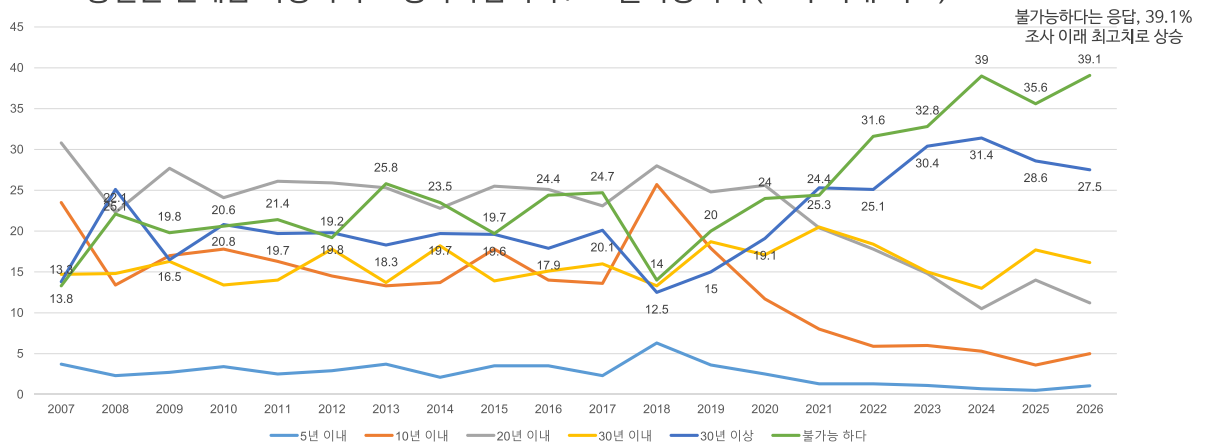
• 통일에 대한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 2~30대: 현재대로+무관심

연령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여건이 성숙 되기를 기다려야							현재대로가 좋다							관심이 별로 없다						
	20	21	22	23	24	25	26	20	21	22	23	24	25	26	20	21	22	23	24	25	26	20	21	22	23	24	25	26	20	21	22	23	24	25	26
19~29세	17	26	29	21	25	11	20	63	78	87	56	47	71	74	487	386	383	345	385	351	355	306	329	324	418	368	347	372	117	178	167	160	165	220	179
30대	17	20	10	27	17	00	29	90	107	80	62	32	40	86	578	489	487	467	422	418	326	255	307	342	299	373	435	419	60	77	71	145	157	107	140
40대	61	20	17	22	18	24	27	120	123	127	114	84	73	99	605	576	489	508	476	531	487	171	222	288	266	321	281	309	43	58	79	90	100	91	79
50대	47	31	53	32	21	22	34	165	159	150	164	114	96	142	562	511	524	485	519	526	470	184	231	199	249	267	253	292	41	67	75	59	79	103	61
60대 이상	46	60	45	30	59	42	49	153	142	209	232	136	140	190	548	559	486	453	446	486	453	182	210	197	223	268	262	240	73	28	63	62	90	59	68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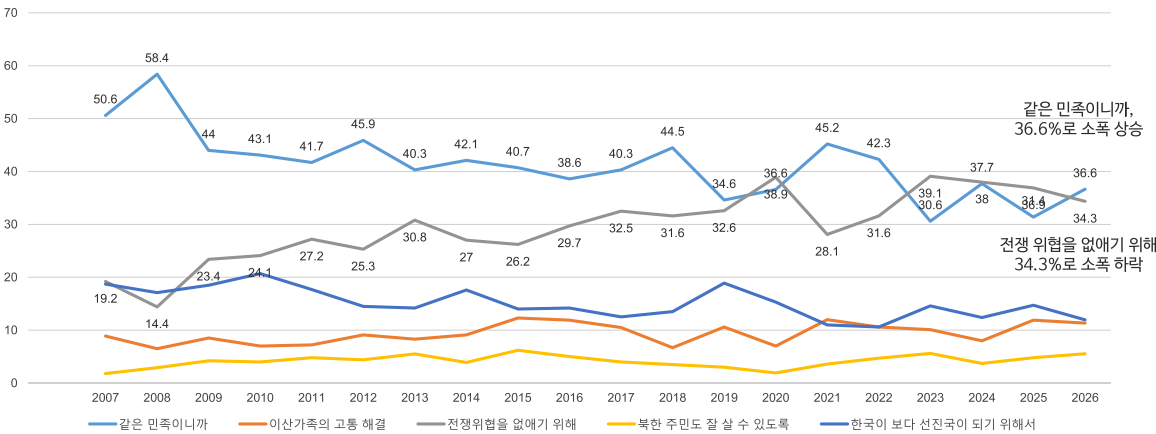
• 통일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불가능하다(조사 이래 최고)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유

•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전쟁위협



통일의식조사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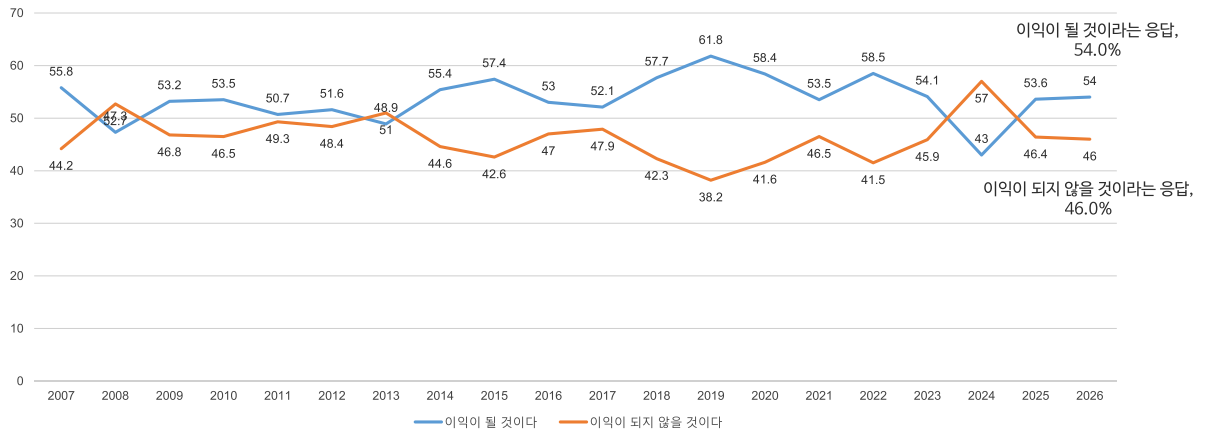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사회적 문제

연도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 불안정
2018	19.2	13.7	35.2	26.8	4.5
2019	17.9	12.7	38.8	25.4	4.6
2020	21.3	13.5	35.0	27.0	2.7
2021	21.1	16.6	33.2	25.9	2.9
2022	21.5	20.1	34.1	20.3	4.0
2023	19.9	13.0	35.4	27.9	3.7
2024	19.2	14.6	33.9	27.9	4.3
2025	18.9	14.3	33.0	29.5	4.2
2026	20.2	17.6	29.1	29.8	3.2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익: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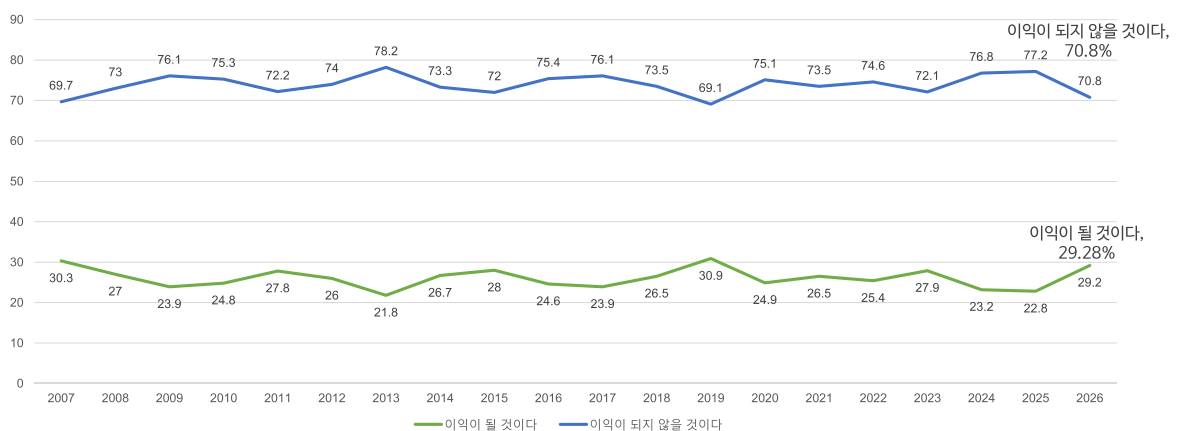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의식조사

통일의 이익: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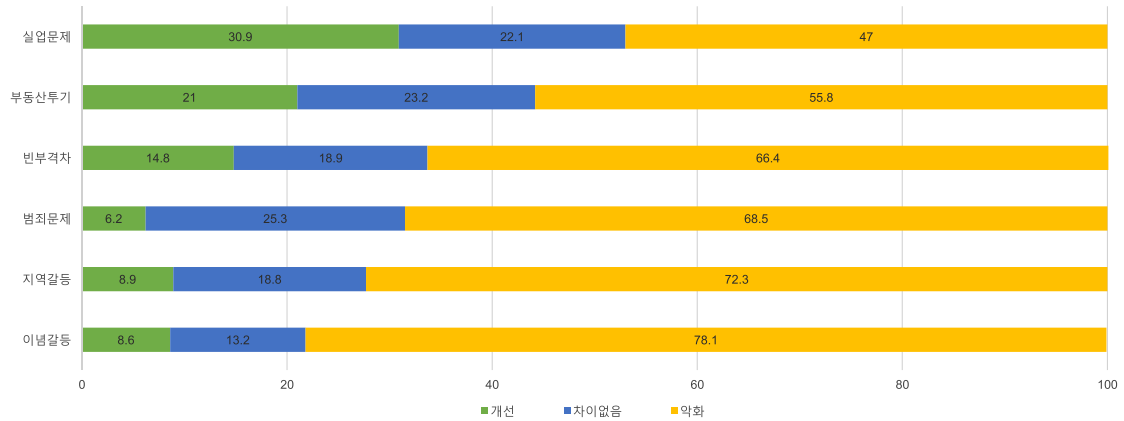
-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익이 되지 않는다



통일의식조사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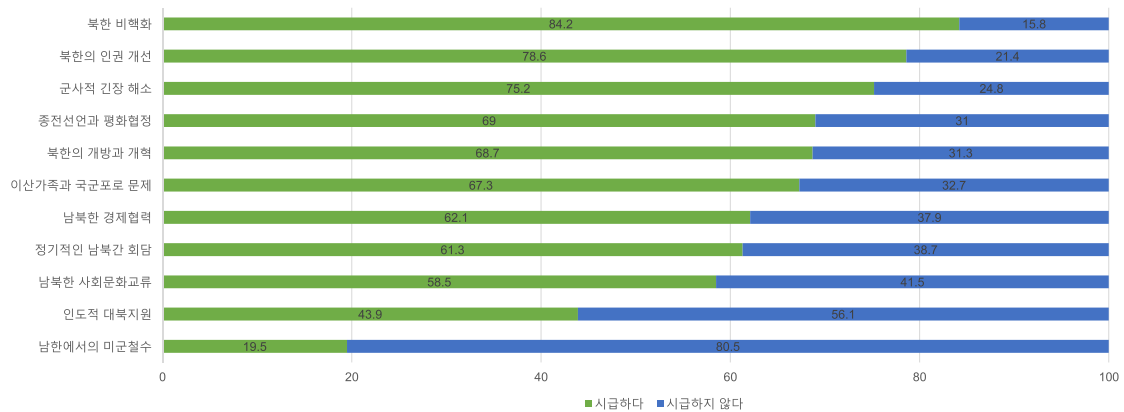
- 통일이 한국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하는지 악화시키는지? → 악화시킨다



통일의식조사

💡 시급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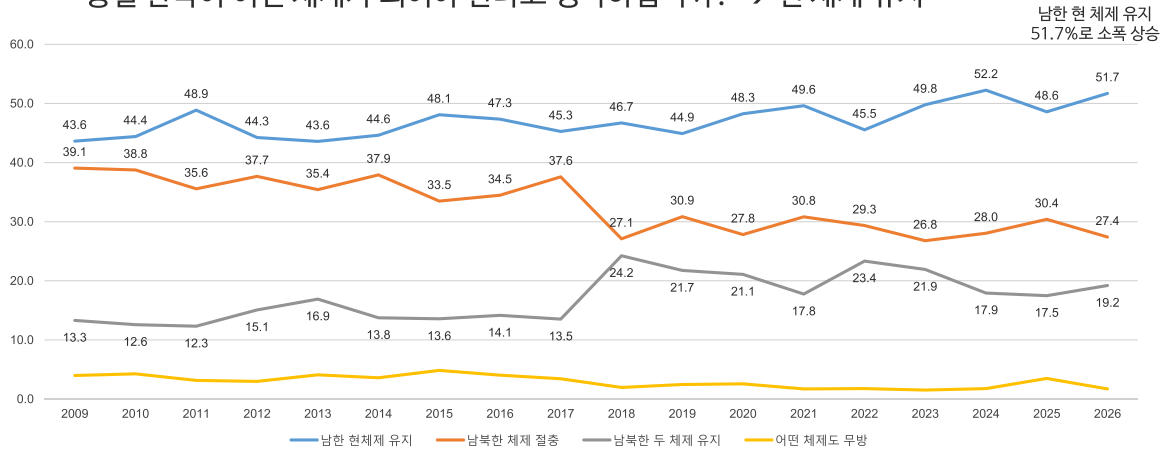
-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 비핵화, 북한의 인권 개선



통일의식조사

💡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 체제 유지



통일의식조사

💡 통일의 이미지

-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통일의 이미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기타
2018	58.1	14.8	19.3	7.5	0.2
2019	60.6	15.0	20.0	4.1	0.3
2020	62.6	13.4	17.7	5.9	0.3
2021	63.6	11.8	18.5	6.1	0.0
2022	58.1	13.2	20.0	8.8	0.0
2023	59.8	12.3	22.5	5.4	0.0
2024	62.3	11.6	19.8	6.2	0.1
2025	60.3	18.0	16.8	4.8	0.1
2026	62.8	14.3	17.2	5.5	0.2

주요 특징 및 경향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 (2007년 63.8% → 2026년 39.0%로 하락)

-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실시된 2025년 조사에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이 다소 상승하였으나 올해 다시 하락세로 반전함
- 2026년 조사에서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39.0%인 반면 '전혀'와 '별로'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32.2%
- 반면 2007년 조사에서 '필요하다' 63.8%, '필요하지 않다' 15.1%
- 통일이 '필요하다' 39.0%는 조사 이래 가장 낮았던 2024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필요하지 않다' 32.2% 또한 2024년 다음으로 높은 수준
- 20대(19~29세)와 30대의 경우 '매우'와 '약간'을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25.2%와 27.0%에 불과한 반면 '별로'와 '전혀'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44.8%와 47.0%에 달함
-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음

주요 특징 및 경향

남북이 분단된 '현재대로가 좋다' (2007년 11.8% → 2026년 31.5%로 상승)

-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중 42.7%로 2025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반면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 비중은 31.5%로 소폭 상승 (조사 이래 최고치로 상승)
- 특히 20대와 30대에서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응답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을 합할 경우 각각 55.1%와 55.9%를 차지

통일은 '불가능하다' (2007년 13.3% → 2026년 39.1%로 상승)

-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9.1%로 조사 이래 최고치로 상승한 반면 '30년 이내'는 모두 포함하여 33.4%에 불과함
- 통일이 '불가능하다'와 '30년 이상'이라는 응답을 합할 경우 66.6%에 달함

주요 특징 및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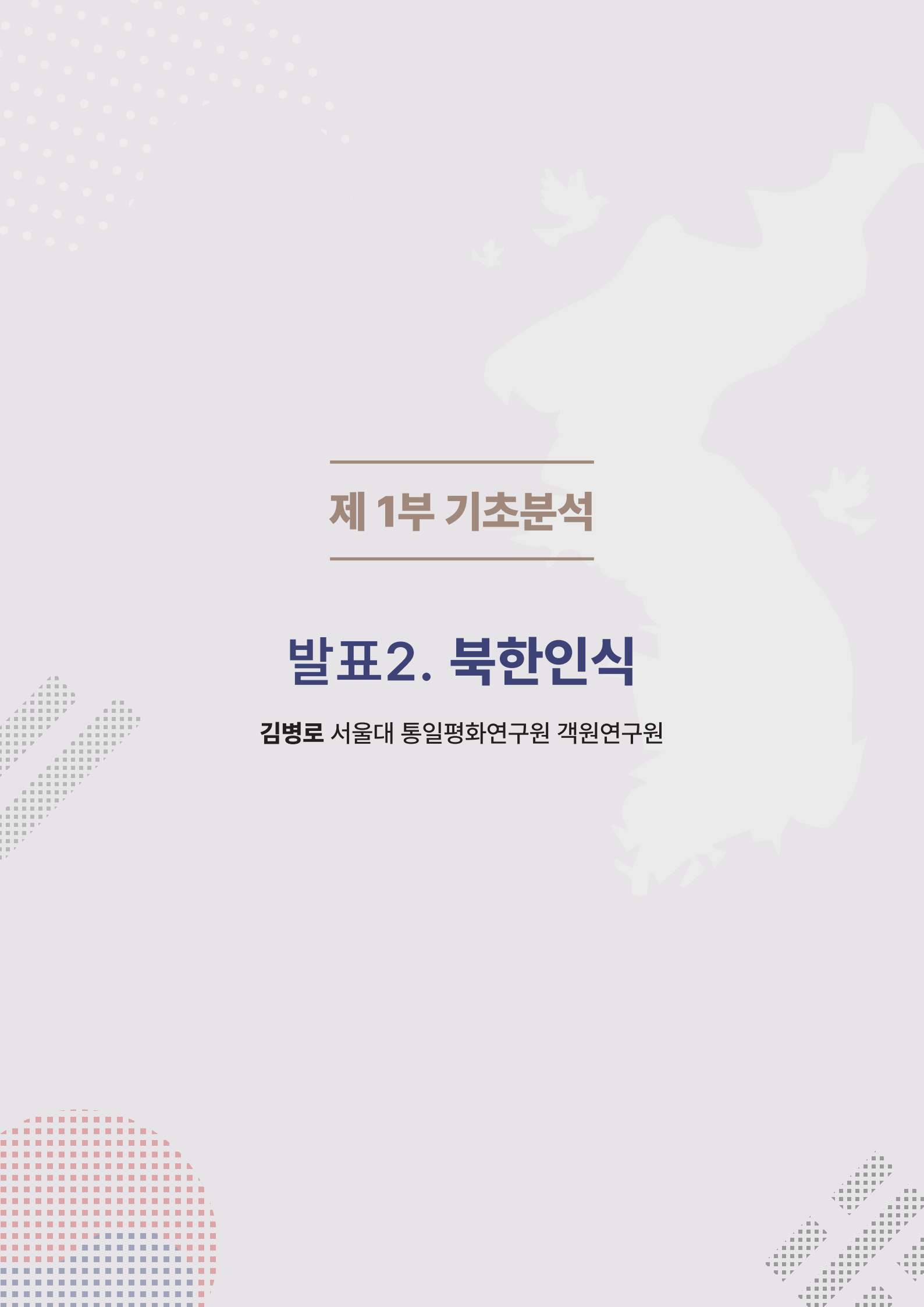
💡 왜? 사회문제 악화 우려 + 경제적 부담 + 기대이익 하락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29.8%가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를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29.1% 차지
-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통일이 이념갈등, 범죄문제, 지역갈등, 빈부격차 등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60%를 넘어서고 있음
- 한편 올해 조사에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 응답 비중은 '매우'와 '다소'를 합해 54.0%,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응답 비중은 46.0%
-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다수이나 '남한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 또한 46.0%로 여전히 높은 수준
- 또한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29.2%인 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은 70.8%에 달함

결론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 ↓ 대북 '피로감' ↑ 반영

-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세로 전환하였으나, 남북 경색 국면이 계속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피로감'과 '실망감'이 널리 퍼지면서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다시 하락세로 반전한 것으로 보임
- 2007년 이후 지난 약 20년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2007년 63.8%에서 2026년 39.0%로 감소한 반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 비중은 15.1%에서 32.2%로 상승함
- '현재대로가 좋다'는 분단 선호 추세도 2007년 11.8%에서 2026년 31.5%로 상승함
-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추세도 2007년 13.3%에서 2026년 39.1%로 상승함
-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제 1부 기초분석

발표2. 북한인식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2026 통일의식조사

북한에 대한 인식 (요약)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1. 대북 인식의 변화: 대립 속 '상호협력' 필요성 및 안보 학습효과

- 북한을 '적·경계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정체 국면(적대18.9%, 경계 23.8%)을 보인 반면, '지원대상'은 12.6%로 5.2%p 하락하고 '협력대상'은 38.7%로 4.7%p 상승
-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대의식이 '경계'로 완화되어 지원 인식이 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북한의 '통일' 삭제 헌법 개정 등으로 대립이 심화하자 위기관리를 위해 남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실용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우려(안보 불안감)는 57.9%로, 전년(56.5%) 대비 1.4%p 소폭 상승했으나, 최고조에 달했던 2023~2024년(약 65%) 대비 7~8%p 낮은 안정적 수준 유지
-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고, 12·3 계엄 정국 및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에 북한이 대응을 자제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북한이 선불리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국민 안보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

2. 북한정권에 대한 위협·회의·불신 등 부정 인식 역대 최고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응답이 86.4%로 조사 이래 최고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 역시 90.4%로 높은 수준 유지
-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정권 불신은 78.3%로 조사 이래 최고
 - 작년(66.5%)보다 11.8%p 상승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2024년 73.5%)을 4.8%p 상회
-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3.3%로 조사 이래 최고
- 2026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추구 포기를 명문화한 북한의 조치가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인식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

3. 북한 국가성 및 영토 인식: 실제 인정과 규범적 불안정의 이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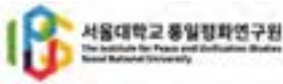
- 실체인정과 규범적 합법성 불일치: 국민 81.1%가 “대한민국과 북한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가”라는 실체적 국가성에 동의한 반면, 북한 정권의 규범적·법적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각(16.4%)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응답은 83.6%로 높음.
- 영토 인식 헌법과 불일치: 대한민국 영토 범위를 헌법 제3조 규정대로 ‘한반도 전체’로 보는 응답은 28.3%에 그친 반면, ‘현재의 남한 지역’으로 한정해 인식하는 응답이 60.8%로 과반 이상을 차지, 국민 다수가 규범적 헌법관보다 실체적 분단 현실을 영토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4. 세대·지역·이념에 따른 대북인식 분화 확대

- 2030 세대에서 ‘적·경계대상’ 인식(20대 49.9%, 30대 51.0%)이 작년 대비 강화되었으며 40~60세대(40대 40.9%, 50대 35.0%, 60대이상 40.8%)와 10~15%p 차이를 보임.
- 호남권의 ‘협력대상’ 응답이 인식이 38.7%→56.0%로 급상승(제주 62.5%)한 반면, 충청권은 ‘협력’이 41.5%→34.6%로 하락하고 ‘적대’ 응답이 9.1%→21.5%로 급증하는 등 지역 간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짐
- 이념에 따른 안보 불안감의 ‘진보>보수’ 역전과 중도의 보수화 진행
 -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진보층의 불안감(62.4%)이 보수층(54.2%)을 앞지르는 이념 간 역전 현상 발생(작년에는 진보 54.2% < 보수 66.6%)
 - 중도층의 대북인식이 보수층과 유사해지며(‘진보>중도≒보수), 전반적인 여론 지형에서 중도층의 보수화 경향 확인 (예년 추이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 위치)

5.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 2026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불신·위협·통일 회의론이 역대 최고조에 달함. 하지만 동시에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안보 학습효과’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 대립 국면을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 상호 협력’의 필요성도 강화됨
- 북한의 통일 폐기 정책이 상수화된 상황에서 향후 북미관계 변화와 이재명 정부 2년차 평화 공존 정책이 어떤 변화의 계기를 추동할지 귀추 주목. 획기적 변화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황 지속되면 북한 정권에 대한 높은 불신 속에서 세대·지역·이념에 따른 대북인식의 분화 및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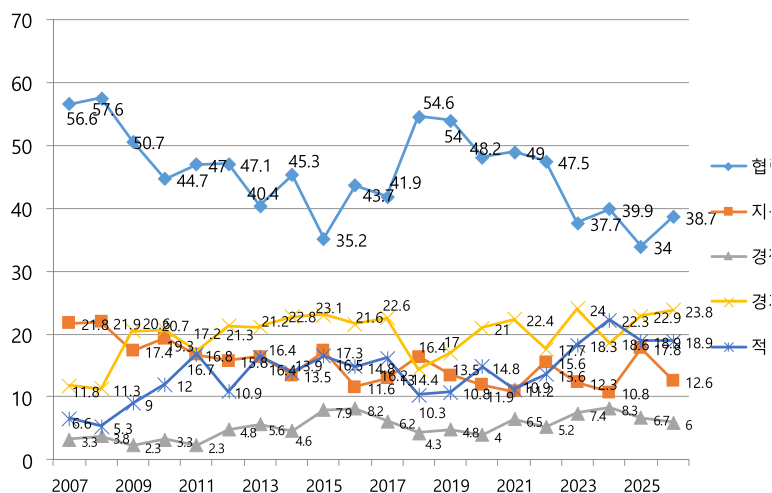
2026 한국인의 대북인식

김병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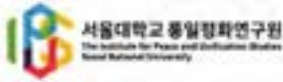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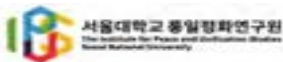
1. 대북인식 변화: 대립 속 '협력' 필요 및 안보 학습효과



- 북한을 '적·경계 대상'으로 보는 시각은 정체 국면(적대18.9%, 경계 23.8%)을 보인 반면, '지원대상'은 12.6%로 5.2%p 하락하고 '협력대상'은 38.7%로 4.7%p 상승
-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적대의식이 '경계'로 완화되어 지원 인식이 늘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북한의 '통일' 삭제 헌법 개정 등으로 대립이 심화하자 위기관리를 위해 남북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실용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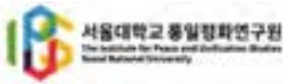


-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우려(안보 불안감)는 57.9%로, 전년(56.5%) 대비 1.4%p 소폭 상승했으나, 최고조에 달했던 2023~2024년(약 65%) 대비 7~8%p 낮은 안정적 수준 유지
-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있고, 12·3 계엄 정국 및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등에 북한이 대응을 자제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북한이 선불리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대국민 **안보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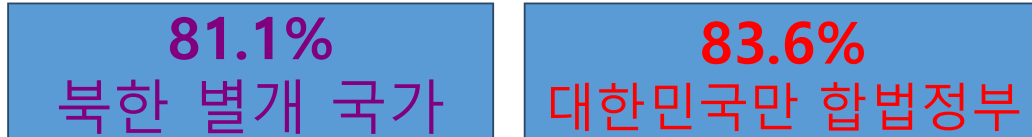
2.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인식(위협·회의·불신) 최고조

-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응답이 **86.4%**로 조사 이래 **최고**
 -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 역시 90.4%로 높은 수준 유지
-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정권불신은 **78.3%**로 조사 이래 **최고**
 - 작년(66.5%)_보다 11.8%p 상승, 역대 최고 수준(2024년 73.5%)을 4.8% 상회
- 북한정권이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83.3%**로 조사 이래 **최고**
- 2026년 3월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추구 포기를 명문화한 북한의 조치가 **북한정권에 대한 부정인식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



3. 북한 국가성 및 영토 인식의 이중성

(1) 실체 인정과 규범적 합법성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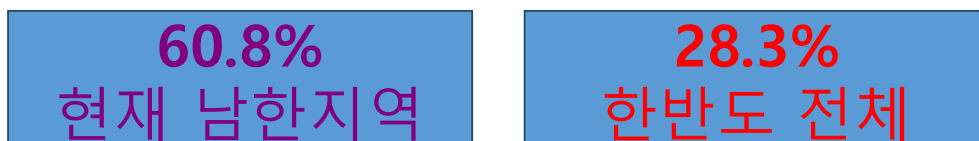


- 국민 81.1%가 “대한민국과 북한은 실질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가”라는 실체적 국가성에 동의한 반면, 북한 정권의 규범적·법적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각(16.4%)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며,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응답은 83.6%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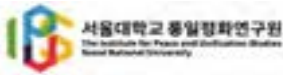


3. 북한 국가성 및 영토 인식의 이중성

(2) 영토 인식 헌법과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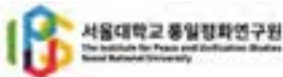


- 대한민국 영토 범위를 헌법 제3조 규정대로 ‘한반도 전체’로 보는 응답은 28.3%에 그친 반면, ‘현재의 남한 지역’으로 한정해 인식하는 응답이 60.8%로 과반 이상을 차지, 국민 다수가 규범적 헌법관보다 실체적 분단 현실을 영토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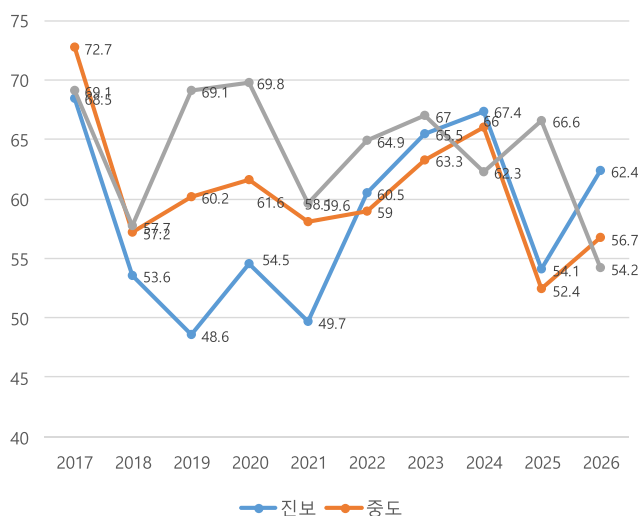
4. 세대·지역·이념에 따른 대북인식 분화 확대

- **2030 세대**에서 '적·경계대상' 인식(20대 49.9%, 30대 51.0%)이 작년 대비 강화되었으며 **40~60세대**(40대 40.9%, 50대 35.0%, 60대이상 40.8%)와 **10~15%p** 차이를 보임.
- 호남권의 '협력대상' 응답이 인식이 38.7%→56.0%로 급상승(제주 62.5%)한 반면, 충청권은 '협력'이 41.5%→34.6%로 하락하고 '적대' 응답이 9.1%→21.5%로 급증하는 등 **지역 간 인식 격차**가 크게 벌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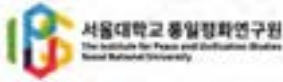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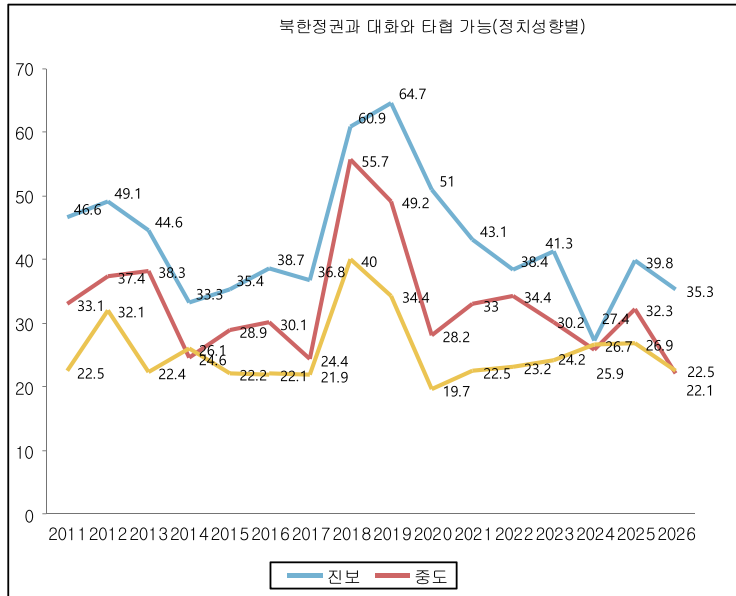


진보vs 보수 안보 불안감 역전

북한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진보층의 불안감(62.4%)이 보수층(54.2%)을 앞지르는 이념 간 역전 현상 발생(작년에는 진보 54.2% < 보수 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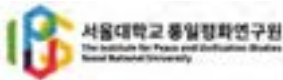


정치성향별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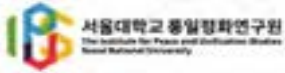
중도의 보수화 진행

중도층의 대북인식이 보수층과 유사해지며('진보>중도>보수'), 전반적인 여론 지형에서 중도층의 보수화 경향 확인 (예년 추이는 진보와 보수의 중간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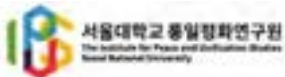


5. 종합 평가 및 향후 전망

- 2026년 한국인의 대북인식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에 따른 불신·위협·통일 회의론이 역대 최고조에 달함.
- 하지만 동시에 도발 가능성에 대한 '안보 학습효과'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과도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 대립 국면을 관리하기 위한 '실용적 상호 협력'의 필요성도 강화됨



- 북한의 통일 폐기정책이 상수화된 상황에서 향후 **북미**관계 변화와 이재명 정부 2년차 평화공존 정책이 어떤 변화의 계기를 추동할지 귀추 주목
- 획기적 전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현 상황 지속되면 북한 정권에 대한 높은 **불신** 속에서 세대·지역·이념에 따른 대북인식의 **분화** 및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감사합니다.

제 1부 기초분석

발표3. 북한이탈주민인식

신혜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 센터장

2026 통일외교조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요약)

신혜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 2026년 북한이탈주민 인식은 일상적 공존은 수용하되 깊은 관계에는 거리를 두고, 입국은 선별하며, 들어온 뒤에는 동일한 경쟁 규칙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리됨
 - 일상적 공존의 수용: 동네 이웃으로 꺼린다 12.3%, 직장 동료 13.7%. 20년간 10%대 초 중반에서 안정적
 - 깊은 관계에는 거리: 결혼상대자로 꺼린다 59.2%로 2007년 조사 이래 최고. 지역 대표 58.6%, 학교 교사 54.5%
 - 입국은 선별: 원하는 사람 중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60.2%, 모두 받아들여야 25.1%로 2007년 52.0%의 절반 이하
 - 들어온 뒤에는 동일한 경쟁 규칙: 북한이탈주민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79.8%로 조사 이래 최고, 1년 만에 12.3%p 상승

■ 북한이탈주민을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 함께 살되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졌으나, 가족 형성과 경제적 신뢰, 대표성처럼 관계의 깊이와 권한이 커질수록 사회적 거리는 오히려 커짐

가장 두드러진 네 가지 수치

-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79.8%: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
 - 2025년 67.5%에서 12.3%p 상승, 상승폭도 조사 이래 최대. 모든 연령대에서 10%p 이상 올랐고 20대 83.7%로 연령대 최고. 정치성향별 차이 작음(중도 82.0%, 진보 78.5%, 보수 76.9%)
 -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도 42.9%로 전년(38.5%)보다 4.4%p 상승. 지원 자체의 거부라기보다 지원과 경쟁의 규칙을 동시에 요구하는 태도
- 결혼상대자로 꺼린다 59.2%: 2007년 이후 최고 (종전 최고 2020년 57.6%)
 - 2025년 55.5%에서 3.7%p 상승.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고 20대 66.2%로 가장 높음. 50대는 49.6%에서 56.6%로 증가폭 최대. 정치성향별 차이는 5%p 이내(보수 62.2%, 중도 59.1%, 진보 57.2%)
 - 사업 동업자로 꺼린다 42.7%로 전년보다 6.4%p 상승. 경제적 신뢰가 개입하면 거리가 급증
- 원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5.1%: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낮음 (최저 2021년 24.7%)

-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60.2%는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높음(최고 2021년 60.6%). 2007년 37.2%에서 크게 상승해 선별적 수용이 주류 인식으로 정착.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14.7%, 20대 19.0%

■ 20대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18.2%: 연령대 최저, 2025년 28.6%에서 10.4%p 하락
전체 친근감은 27.4%(2025년 29.1%)로 미국인 36.4%, 일본인 28.8% 다음 세 번째. 반반/보통이 46.4%로 가장 큰 집단

- 2025년에는 연령 간 차이가 3%p 이내였으나 2026년 20대와 60대 이상(32.0%) 격차가 13.8%p로 벌어짐. 20대의 친근하지 않다 37.3%는 전 연령대 최고. 50대 이상은 소폭 상승

집단별 차이

■ 20대는 친근감 최저(18.2%), 결혼상대자 꺼림 최고(66.2%), 수용 거부 최고(19.0%), 동일 경쟁 동의 최고(83.7%)를 동시에 보임. 청년층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민족적 내부자로 보는 감각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

■ 친근감(진보 36.5%, 중도 23.2%, 보수 24.4%)과 정부 추가지원 동의(진보 48.4%, 보수 34.1%)에는 이념 차이가 뚜렷하나, 동일 경쟁 동의는 모든 성향에서 매우 높음. 세대와 이념을 넘어 공통적으로 강화되는 규범은 동일한 경쟁

해석과 남는 과제

■ 민족적 친밀성의 약화: 20대 친근감 최저, 모두 수용의 장기 감소, 북한이탈주민을 자동적으로 내부자로 보는 감각의 약화

■ 시민적 평등 규범의 강화: 동일 경쟁 79.8% 역대 최고, 선별 수용 60.2%, 특혜보다 동일 규칙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 통일 필요성 하락과 분단 현상 유지 선호 상승(발표1)과 같은 방향

■ 남는 과제: 동일한 규칙이 실질적 평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가, 정착 초기의 불리함과 차별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결혼 기피와 경쟁 요구가 같은 해에 함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일시적 반응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향후 조사에서 확인할 필요

- 인식조사는 태도의 방향을 보여주며 원인에 대한 해석은 추가 분석이 필요함. 학교 교사와 지역 대표 문항은 2020년 이후 비교만 가능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2026 통일외식조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일상적 공존은 수용, 깊은 관계에는 거리, 입국은 선별, 들어온 뒤에는 동일한 경쟁 규칙

신혜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센터장

2026. 9. 29.

통일외식조사 20년: 멀어진 통일의 꿈, 익숙해진 분단 현실

전체 해석

2026년 북한이탈주민 인식의 방향에 네 가지가 동시에 강해졌다



일상적 공존은 수용한다	깊은 관계에는 거리를 둔다	입국은 선별한다	들어온 뒤에는 동일한 경쟁 규칙
12.3%	59.2%	60.2%	79.8%
이웃으로 꺼린다	결혼상대자로 꺼린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직장 동료 13.7% 20년간 10%대 초중반	2007년 이래 최고 지역 대표 58.6%, 교사 54.5%	모두 받아들여야 25.1% 2007년 52.0%의 절반 이하	2007년 이래 최고 1년 만에 12.3%p 상승

핵심 해석

2026년의 특징은 옆에 사는 것은 받아들여되 가족과 대표성이 걸린 자리에서는 물러서고, 들어오는 사람은 골라 받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같은 규칙을 요구하는 태도가 한 해에 함께 강해졌다. 북한이탈주민을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되 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사회 구성원으로 보는 경향이다.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 (2007~2026)

주요 특징



2026년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네 가지 수치

79.8%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2007년 조사 이래 최고
2025년 67.5%에서 12.3%p 상승
상승폭도 조사 이래 최대

59.2%

결혼상대자로
꺼린다

2007년 조사 이래 최고
(종전 최고 2020년 57.6%)
2025년 55.5%에서 3.7%p 상승

25.1%

원하는 사람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낮음
(최저 2021년 24.7%)
2007년 52.0%의 절반 이하

친근감

20대의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연령대 최저
2025년 28.6%에서 10.4%p 하락
친근하지 않다 37.3%로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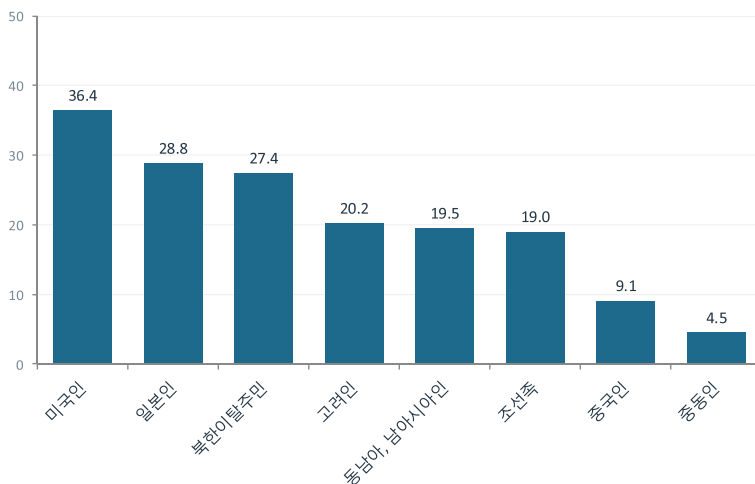
- 동일 경쟁 동의는 모든 연령대에서 10%p 이상 상승했고 20대 83.7%로 연령대 최고
- 결혼상대자 기피도 20대 66.2%로 연령대 최고. 정치성향별 차이는 5%p 이내(보수 62.2%, 중도 59.1%, 진보 57.2%)
- 20대는 친근감 최저, 결혼 기피 최고, 수용 거부 최고(19.0%), 경쟁 요구 최고를 한 세대가 동시에 보임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01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은 이주자 집단 중 상대적으로 친근한 편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27.4%

- 미국인 36.4%, 일본인 28.8% 다음으로 세 번째
- 2025년 29.1%에서 1.7%p 하락. 2016년 이래 다섯 번째 높은 수준
- 반반 또는 보통이 46.4%로 가장 큰 집단. 친근감이 강하게 형성됐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려인 20.2%는 문항 도입 이래 최고, 중국인 9.1%는 조사 이래 최저

동포라는 상징적 친밀성과 실제 사회적 친근감은 동일하지 않다.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01 친근감

세대가 젊을수록 친근감이 낮다: 20대는 1년 사이 10.4%p 10.4%p 하락



연령대	친근 2025	친근 2026	증감	친근하지 않다 2026
전체	29.1	27.4	-1.7	26.2
19~29세	28.6	18.2	-10.4	37.3
30대	26.5	22.9	-3.6	27.3
40대	28.9	27.4	-1.5	28.3
50대	29.2	31.7	+2.5	19.3
60대 이상	31.3	32.0	+0.7	23.3

2025년 연령별 수치는 로데이터 가중 산출

18.2%

19~29세의 북한이탈주민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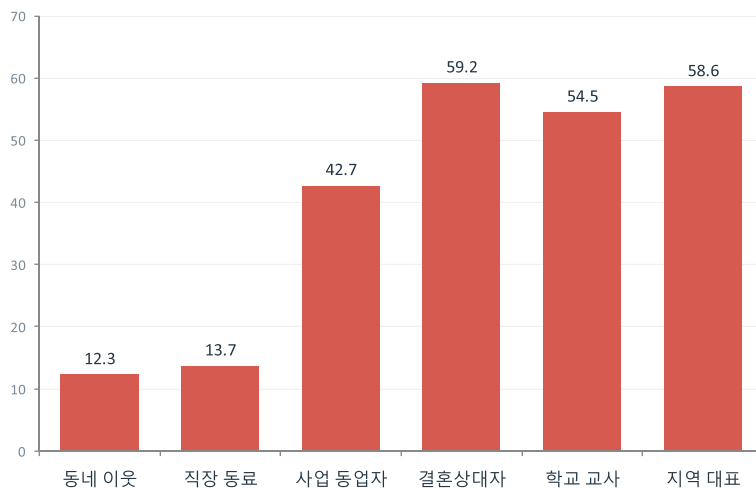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음

- 2025년에는 연령 간 차이가 3% p 이내 였으나 2026년 20대와 60대 이상 격차가 13.8% p로 벌어짐
- 50대 이상은 소폭 상승. 2026년 친근감을 받친 것은 50대 이상
- 청년층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민족적 내부자로 보는 감각이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02 사회적 거리

일상적 관계는 수용하지만, 깊은 관계와 권한 공유에는 거리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관계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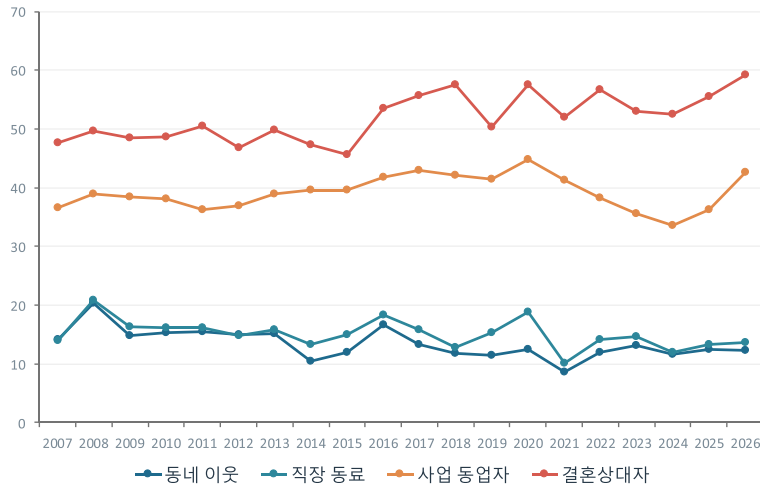
- 이웃 12.3%, 직장 동료 13.7%: 일상적 공존에는 낮은 거부감
- 사업 동업자 42.7%: 경제적 신뢰가 개입하면 거리 급증
- 결혼상대자 59.2%, 지역 대표 58.6%, 학교 교사 54.5%: 가족, 대표성, 권한의 영역에서 높은 거리감

같이 사는 것과 가까운 관계나 권한을 맡기는 것 사이의 간극

02 사회적 거리



결혼상대자 거부감 59.2%: 2007년 이후 최고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59.2%

결혼상대자 꺼린다

2007년 이후 최고 (증전 2020년 57.6%)

42.7%

사업 동업자 꺼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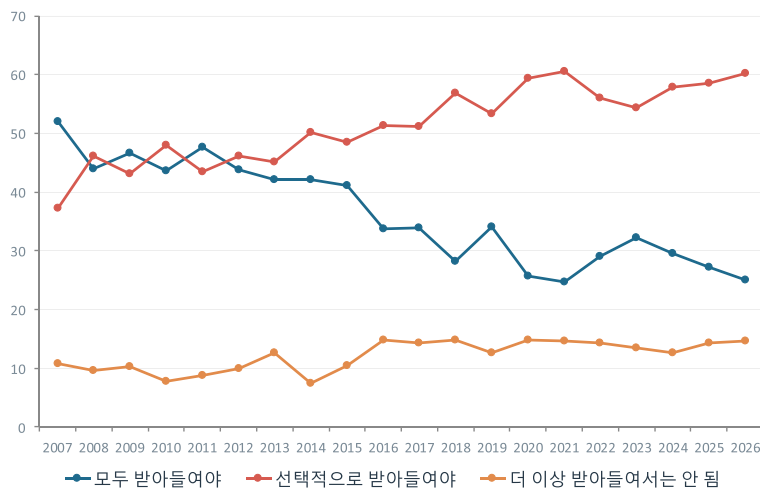
2025년보다 6.4%p 상승

결혼상대자 기피는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 20대 66.2%로 가장 높고 50대는 7.0%p 상승으로 증가폭 최대.

03 수용정책



모두 수용보다 선택적 수용이 지배적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25.1%

모두 수용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낮음 (최저 2021년 24.7%)

60.2%

선택적 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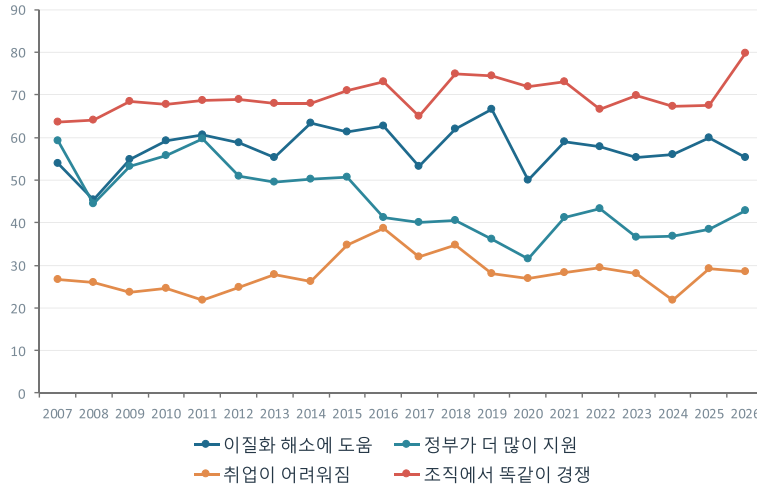
조사 이래 두 번째로 높음 (최고 2021년 60.6%)

선택 수용은 2007년 37.2%에서 60.2%로 상승.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은 20대 19.0%, 30대 17.2%로 젊은 세대에서 높다.

04 시민권과 지원 규범



지원보다 동일한 경쟁 규범이 강해졌다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인식조사 (2007~2026)

79.8%
똑같이 경쟁해야

2007년 이후 최고

2025년 67.5% → 2026년 79.8%
한 해 사이 12.3%p 상승

정부의 추가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도 42.9%로 전년보다 4.4%p 상승했다. 즉 지원 자체의 거부라기보다, 지원과 경쟁의 규칙을 동시에 요구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응답은 28.5%로 경제적 위험 인식이 다수는 아니다.

04 시민권과 지원 규범



동일 경쟁 동의는 모든 연령대에서 10%p 이상 상승

연령대	경쟁 2025	경쟁 2026	증감	지원 2025	지원 2026
전체	67.5	79.8	+ 12.3	38.5	42.9
19~29세	72.1	83.7	+ 11.6	37.6	38.3
30대	62.3	79.5	+ 17.2	35.8	39.2
40대	67.0	78.6	+ 11.6	40.6	38.2
50대	72.5	81.8	+ 9.3	36.9	45.7
60대 이상	64.4	77.1	+ 12.7	40.4	48.7

2025년 연령별 수치는 로데이터 가중 산출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인식조사 (2007~2026)

83.7%
20대 동일 경쟁 동의

연령대 최고, 30대는 17.2%p 상승

- 경쟁 동의는 정치성향별 차이가 작음: 중도 82.0%, 진보 78.5%, 보수 76.9%
- 정부 지원 확대 동의는 진보 48.4%, 보수 34.1%로 성향 차이가 큼. 60대 이상 48.7%, 40대 38.2%
- 지원에는 갈리지만 같은 규칙에는 모두 동의

05 집단별 차이



청년층의 거리감, 그리고 이념을 넘는 통일 경쟁

연령별

18.2% 20대 친근감 연령대 최저	20대 결혼상대자 꺼림 연령대 최고	83.7% 20대 통일 경쟁 동의 연령대 최고
-----------------------------------	-------------------------------	--

정치적 성향별

문항	진보	중도	보수
친근감	36.5	23.2	24.4
정부 추가지원 동의	48.4	43.4	34.1
결혼상대자 꺼림	57.2	59.1	62.2
통일 경쟁 동의	78.5	82.0	76.9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두 가지 분화

- 친근감과 지원에는 이념 차이가 뚜렷함: 진보층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
- 하지만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응답은 진보 78.5%, 중도 82.0%, 보수 76.9%로 모두 매우 높음
- 세대 차이와 이념 차이가 존재해도, 공통적으로 강화되는 규범은 동일한 경쟁

06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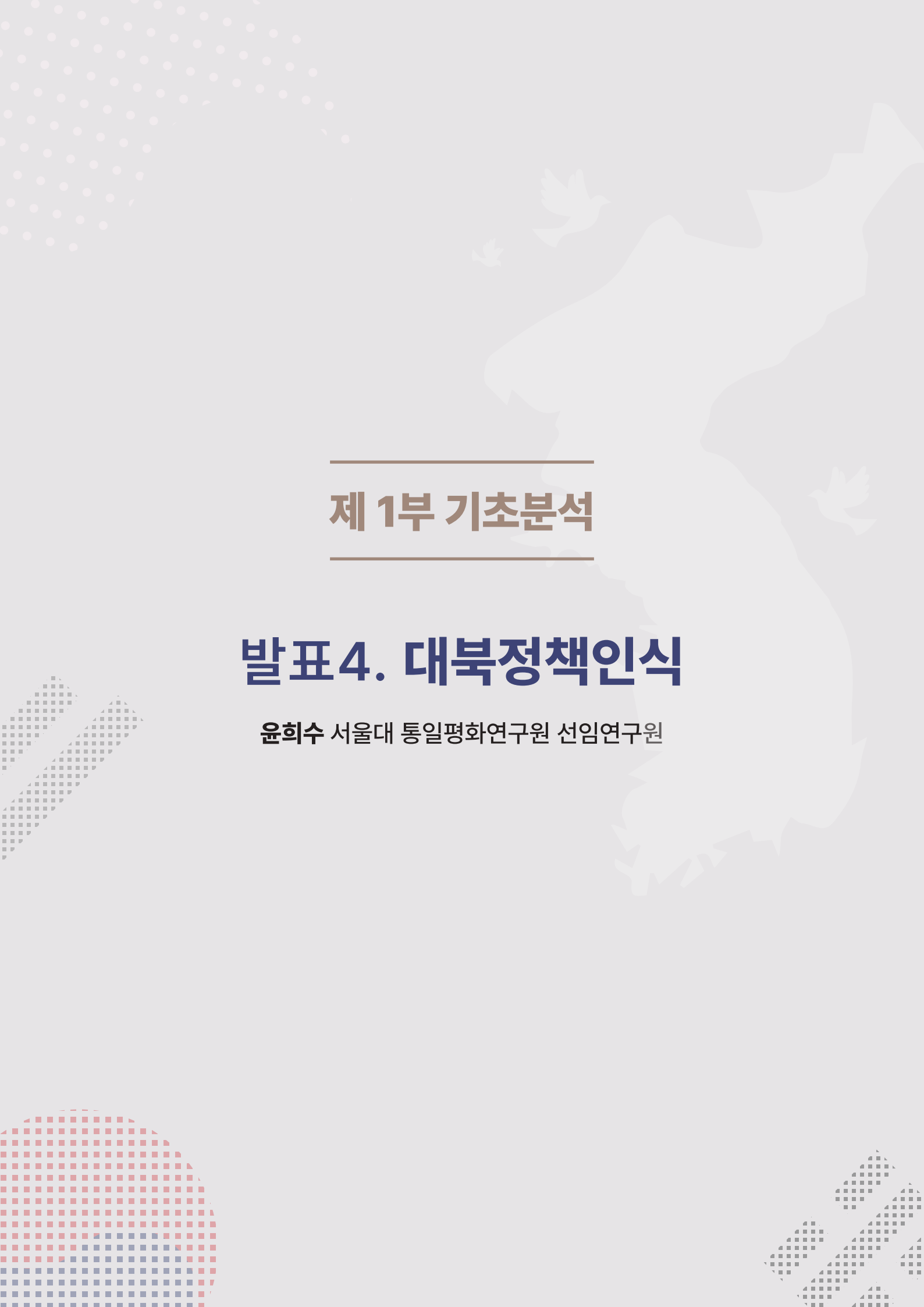


특별한 동포에서 함께 사는 시민으로?

민족적 친밀성의 약화	시민적 평등 규범의 강화	남는 과제
• 20대에서 친근감 최저(18.2%), 1년 사이 10.4%p 하락 • 모두 수용은 장기적으로 감소 (52.0% → 25.1%) • 북한이탈주민을 자동적으로 내부자로 보는 감각이 약해짐	• 통일 경쟁 79.8%, 역대 최고 • 선별 수용 60.2% • 특혜보다 동일 규칙과 공정성을 강조하는 방향	• 동일한 규칙이 실질적 평등을 자동으로 보장하는가? • 정착 초기의 불리함과 차별을 어떻게 보정할 것인가? • 결혼 기피와 경쟁 요구가 같은 해에 함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일시적 반응인지 구조적 전환인지

인식조사는 태도의 방향을 보여주며, 원인에 대한 해석은 추가 분석이 필요함. 통일 필요성 하락과 분단 현상 유지 선호 상승(발표1)과 같은 방향의 변화.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07~2026)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gray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op left corner, there is a cluster of small white dots. Three white doves are depicted in flight across the map. The bottom left corner contains a circular pattern of red and blue dots, and the bottom right corner has a pattern of gray dots.

제 1부 기초분석

발표4. 대북정책인식

윤희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요약)

윤희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2026 년 통일의식조사에서 정부 대북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평화공존을 선택한 응답은 61.6%였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0.9%로 나타났으며, 개별 사업과 정책 수단에 대한 평가는 현안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평화공존이라는 목표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구체적인 정책의 추진 방식과 효과에 대한 동의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조사의 주요 특징이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초가 유지되고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호응도 제한적이어서 대화와 교류의 복원에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정책 목표, 정부 평가, 개별 현안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고, 전년 대비 변화와 장기 추이, 연령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인식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대북정책 목표로 '평화공존·평화정착'을 선택한 비율은 61.6%로, 2025 년 61.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혁개방·경제공동체'는 22.6%, '남북통일'은 15.3%였다. 남북통일 응답은 전년보다 1.6%p 높아졌지만 2021 년의 18.6%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수치는 대북정책의 우선 목표를 선택한 결과이므로 통일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 수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연령 및 정치적 성향 집단에서 과반이 평화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선택했으며, 19~29 세에서는 69.7%로 가장 높았다. 통일과 경제협력 구상을 설명할 때에도 긴장 완화와 안정 확보라는 국민의 우선적인 요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0.9%로 전년의 52.0%보다 1.1%p 낮아졌다. 불만족은 49.1%였고, '매우 만족'은 2.3%에 그쳤다. 정치적 성향별 만족도는 진보 61.8%, 중도 50.0%, 보수 38.0%로 진보와 보수 간 격차가 23.8%p였다. 연령별로는 19~29 세 44.8%, 30 대 46.7%, 40 대 58.7%, 50 대 54.3%로 차이가 나타났다.

장기 추이에는 여러 정부와 서로 다른 정세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평화공존 원칙에 대한 공감과 현 정부의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는 구분되며, 정책의 추진 조건과 단계,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남북합의 계승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남북합의를 계승해야 한다는 동의는 67.1%로 전년보다 2.1%p 높아졌다. 2008년 42.8%에 비해 크게 높아졌고, 모든 연령과 정치적 성향 집단에서 과반을 차지했다. 합의의 연속성에 대한 공감의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실제 이행 조건과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찬성은 61.6%로 전년보다 1.8%p 낮아졌다. 반대도 17.0%에서 13.1%로 감소했으며, '매우 찬성'은 줄고 '반반' 응답은 늘었다. 찬성률의 하락만으로 규제 반대가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긴장 관리에 대한 공감을 실제 규제 방식에 대한 이해로 연결하는 설명이 요구된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은 찬성 34.5%, 반대 34.0%, 반반 31.5%로 찬반이 거의 균형을 이루었다. 19~29세의 찬성률은 26.5%로 가장 낮았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찬성 45.6%, 반대 22.6%로 찬성이 우세했지만, 반반 응답이 전년보다 6.8%p 늘어난 31.7%를 기록했다. 중도층의 사업 찬성은 보수층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도적 지원도 찬성 38.3%, 반반 38.7%로 판단을 유보한 응답이 많았다.

교류협력 사업은 사업별로 찬반과 유보의 구성이 다르다. 재개의 명분과 함께 신변안전과 재산권 보장, 제재와의 정합성 등 구체적인 추진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북핵 해결 조건과 북한인권 문제 제기

북핵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금지에 대한 찬성은 39.7%로 전년보다 5.2%p 높아졌다. 반대는 25.8%, 반반은 34.5%였다. 찬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나 과반에 이르지 않는 않았다.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찬성은 58.8%로 4.1%p 상승하여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모든 집단에서 과반이 찬성했으며, 19~29세는 66.4%였다. 교류협력의 안보 조건과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 및 경로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찬성은 61.1%로 전년의 51.8%보다 9.3%p 상승했고, 종전 최고치인 55.8%도 넘어섰다. 반반 응답은 7.3%p 감소한 23.1%로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보수 66.6%, 중도 60.8%, 진보 57.6%를 비롯해 모든 연령과 정치적 성향 집단에서 과반이 찬성했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개인별 태도 전환을 추적한 결과가 아니다. 문항 역시 일반적인 핵 보유 찬반을 묻고 있어, 찬성률을 구체적인 비용이나 외교적 부담에 대한 동의로 볼 수는 없다. 핵 보유에 대한 지지와 실제 부담에 대한 판단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대북정책 분야별 실효성 인식

북한 개혁개방 기여 인식

북한의 개혁개방에 기여한다고 평가한 비율은 사회문화교류 66.1%, 경제협력 65.1%, 인도적 지원 54.7%, 대북 제재 44.9% 순이었다. 네 분야 모두 전년보다 높아졌으며, 분야 간 평가 순위는 유지되었다. 대북 제재의 기여 인식은 10.1%p 상승해 2025 년의 낮은 평가에서 반등했다.

보수층에서도 경제협력 63.4%, 사회문화교류 59.3%로 대북 제재 51.9%보다 높았다. 19~29 세는 교류와 지원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으나, 사회문화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 평가는 모두 60%대였다. 제재에 대한 평가 상승과 교류협력에 대한 높은 효과 인식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 수단을 조합할 필요가 있다.

북한 비핵화 기여 인식

북한 비핵화에 대한 경제협력의 기여 인식은 48.7%로 전년의 56.5%보다 7.8%p 낮아졌다. 군사회담은 54.1%로 5.2%p 하락한 반면, 군사적 억지력은 43.6%로 7.8%p 높아졌다. 19~29 세는 모든 비핵화 수단에 대한 효과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경제협력의 개혁개방 기여 인식과 비핵화 기여 인식 간 격차는 2025 년 4.8%p 에서 2026 년 16.4%p 로 확대되었다. 개혁개방 효과를 긍정하면서 비핵화 효과는 부정한 응답도 각 연도 전체 응답자 기준 16.2%에서 24.5%로 늘었다. 이는 개인별 인식 전환을 뜻하지 않지만, 경제협력의 효과를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응답의 비중이 커졌음을 보여준다. 경제협력이 개혁개방과 비핵화에 각각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6 결론과 정책적 함의

2026 년 대북정책 인식에서는 평화공존을 우선하는 지향과 개별 수단에 대한 조건부 판단이 함께 나타난다. 평화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선택한 응답은 61.6%에 이르지만, 정부 만족도는 50.9%였고 개성공단 재가동은 찬반이 비슷했다. 목표에 대한 공감의 범위와 개별 사업에 대한 동의의 범위를 구분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설명해야 한다.

특히 핵무장 찬성률이 종전 최고치를 넘어선 점과 경제협력의 개혁개방·비핵화 효과 인식 간 격차가 확대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남북합의 계승에 대한 동의와 교류협력의 개혁개방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하나의 찬반 구도로 묶기보다는 현안별 변화와 정책 목표별 평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19~29 세와 중도층의 태도 역시 현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책 설명은 집단별 입장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각 현안에서 드러나는 우려와 판단 유보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평화공존이라는 목표가 구체적인 정책 지지로 이어지려면 추진 조건과 단계, 안전 보장, 기대 성과를 명확히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26 통일외교조사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윤희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서론

2026년,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 구체화

정부의 정책 방향

평화공존 추진

평화공존 제도화 ·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남북관계의 현실

대화·교류 복원 제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 유지
정부의 관계 개선 추진에도 북한 호응은 제한적

목표에 대한 공감과 정책 수행·수단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음

01

정책 목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02

정부 평가

현 정부의 정책에 만족하는가

03

개별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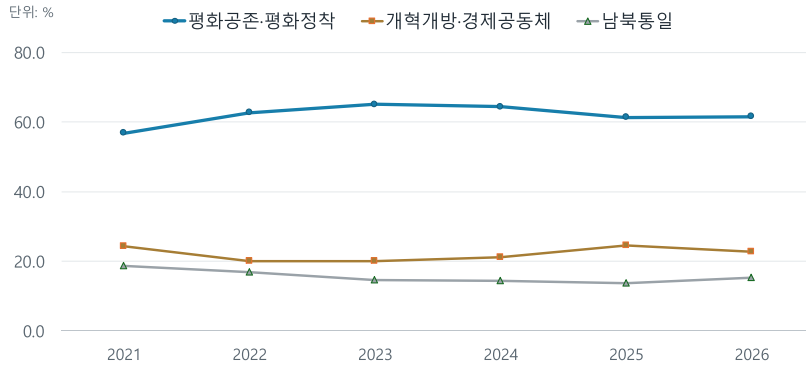
어떤 수단과 조건을 지지하는가

전년 대비 변화와 장기 추이, 연령·정치적 성향별 차이를 함께 검토



2. 정부 대북정책 목표 인식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 인식



평화공존·평화정착

61.6%

2025년 61.3%와 유사

개혁개방·경제공동체 22.6%

남북통일 15.3%

통일 응답은 1.6%p 상승
2021년 18.6%보다는 낮음

모든 연령·정치적 성향 집단에서 과반이 평화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선택

19~29세 69.7%로 가장 높음. 통일 15.3%는 '우선 목표' 선택 비율로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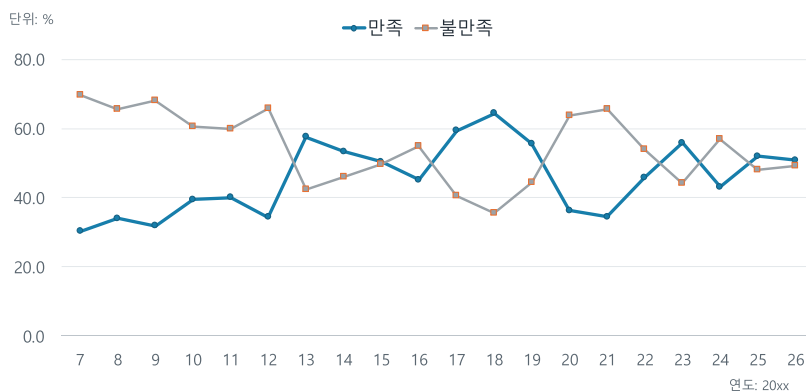
정책적 함의 통일·경제협력 구상을 긴장 완화와 안정 확보라는 우선 목표에 연결할 필요



03

3.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



만족

50.9%

2025년 52.0% 대비 -1.1%p

불만족 4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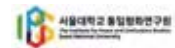
'매우 만족'은 2.3%

장기 추이에는 여러 정부와
서로 다른 정세의 평가가 포함

진보 61.8% 중도 50.0% 보수 38.0% 성향 간 격차 23.8%p

연령별 만족: 19~29세 44.8%, 30대 46.7%, 40대 58.7%, 50대 54.3%

정책적 함의 평화공존 원칙과 함께 정책의 추진 조건·단계, 실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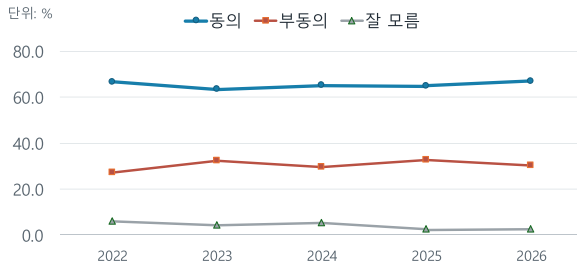
04

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남북합의 계승과 전단 살포 자제에 폭넓은 동의

정권 교체와 무관한 남북합의 계승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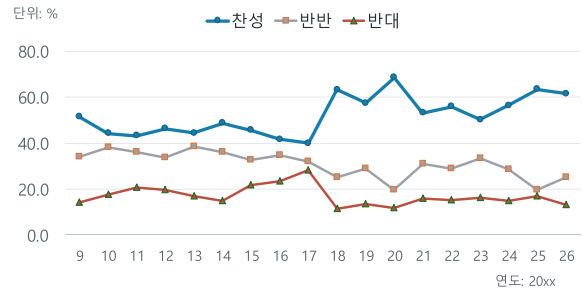
67.1% 동의 전년 대비 +2.1%p



2008년 42.8%에서 2026년 67.1%로 상승
모든 연령·성향 집단에서 과반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한 인식

61.6% 찬성 전년 대비 -1.8%p



반대도 17.0%에서 13.1%로 감소
매우 찬성 감소, 반반 응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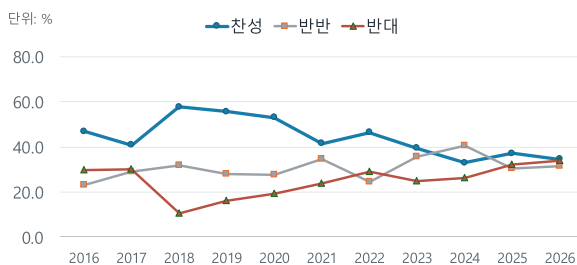
정책적 함의 합의의 연속성과 긴장 관리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행·규제 방식을 구체화할 필요

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개성공단은 찬반 균형, 금강산관광은 유보 확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인식

34.5% 찬성 반대 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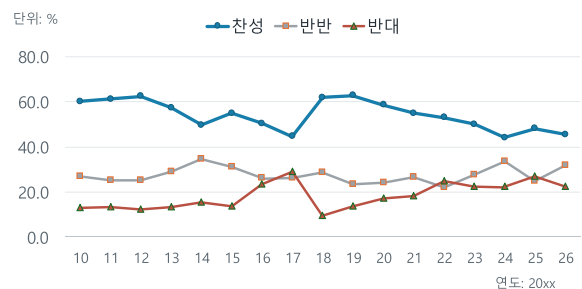
찬반 차이 0.5%p, 반반 31.5%
19~29세 찬성 26.5%로 가장 낮음

인도적 지원도 찬성 38.3%, 반반 38.7%로 판단 유보가 많음

정책적 함의 사업 재개의 명분과 함께 신변안전·재산권 보장, 제재와의 정합성을 제시할 필요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인식

45.6% 찬성 반대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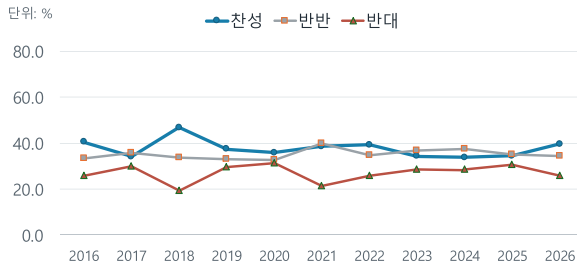
반반 31.7%, 전년 대비 +6.8%p
중도층의 사업 찬성은 보수층보다 낮음

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북핵 해결 조건과 북한인권 문제 제기 찬성 증가

북핵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금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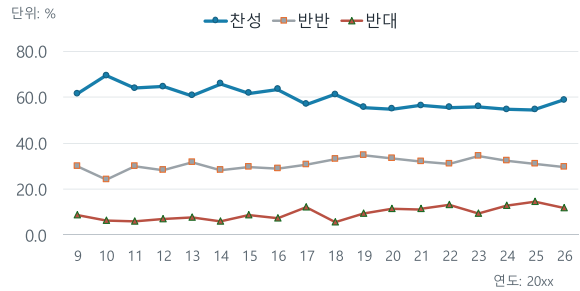
39.7% 찬성 전년 대비 +5.2%p



반대 25.8%, 반반 34.5%
찬성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지만 과반 미달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한 인식

58.8% 찬성 전년 대비 +4.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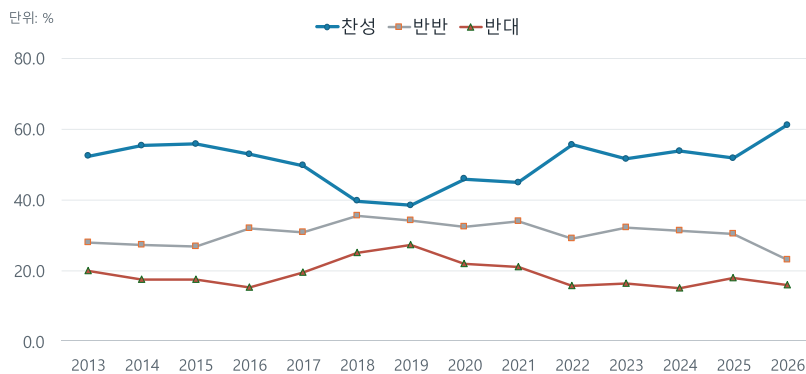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찬성률
19~29세 66.4%, 모든 집단에서 과반

정책적 함의 교류협력의 안보 조건과 북한인권 문제 제기의 방식·경로를 구분해 설명할 필요

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



핵무장 찬성

61.1%

2025년 51.8% 대비 +9.3%p

종전 최고 55.8%보다 +5.3%p
반반 23.1%, 조사 이래 최저

모든 연령·성향 집단에서 과반
보수 66.6%, 중도 60.8%, 진보 5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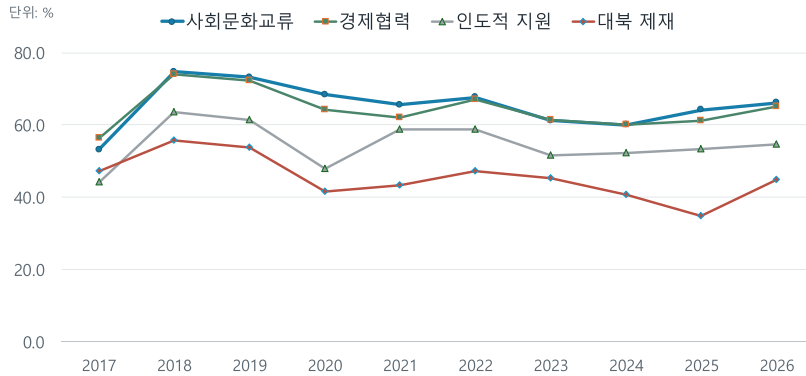
찬성 확대와 함께 **유보 비율이 7.3%p 감소**. 개인의 태도 전환을 추적한 결과는 아님

일반적인 핵 보유 찬반 문항으로, 구체적인 비용·외교적 부담에 대한 동의까지 뜻하지 않음

정책적 함의 핵 보유 찬성률과 별개로 구체적인 비용·외교적 부담에 대한 판단을 확인할 필요

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 분야별 실효성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개혁개방 기여 인식



사회문화교류 / 경제협력

66.1 / 65.1%

인도적 지원 54.7%, 제재 44.9%

제재의 기여 인식은 +10.1%p
2025년의 낮은 평가에서 반등네 분야 모두 전년 대비 상승
분야 간 평가 순위는 유지

보수층에서도 경제협력 63.4%, 사회문화교류 59.3%로 제재 51.9%보다 높음

19~29세는 교류·지원의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나, 교류·경제협력은 모두 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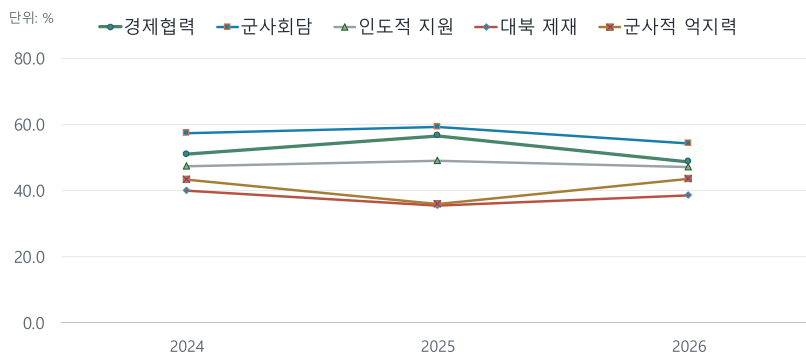
정책적 함의 제재 평가의 반등과 교류·협력의 높은 효과 인식을 함께 고려해 수단을 조합할 필요



09

4. 정부 대북정책 현안 인식 / 분야별 실효성

대북정책 분야별 북한 비핵화 기여 인식



경제협력의 비핵화 기여

48.7%

2025년 56.5% 대비 -7.8%p

군사회담 54.1% (-5.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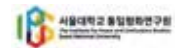
군사적 억지력 43.6% (+7.8%p)

경제협력의 목표별 평가 격차
4.8%p에서 16.4%p로 확대

개혁개방 효과는 긍정하면서 비핵화 효과는 부정한 응답: 2025년 16.2%, 2026년 24.5%

각 연도 전체 응답자 기준. 개인별 전환은 아님. 19~29세는 모든 비핵화 수단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정책적 함의 경제협력의 개혁개방 목표와 비핵화 목표를 구분하고 수단별 기대 성과를 제시할 필요



10

5. 결론

결론**01 평화공존 지향과 조건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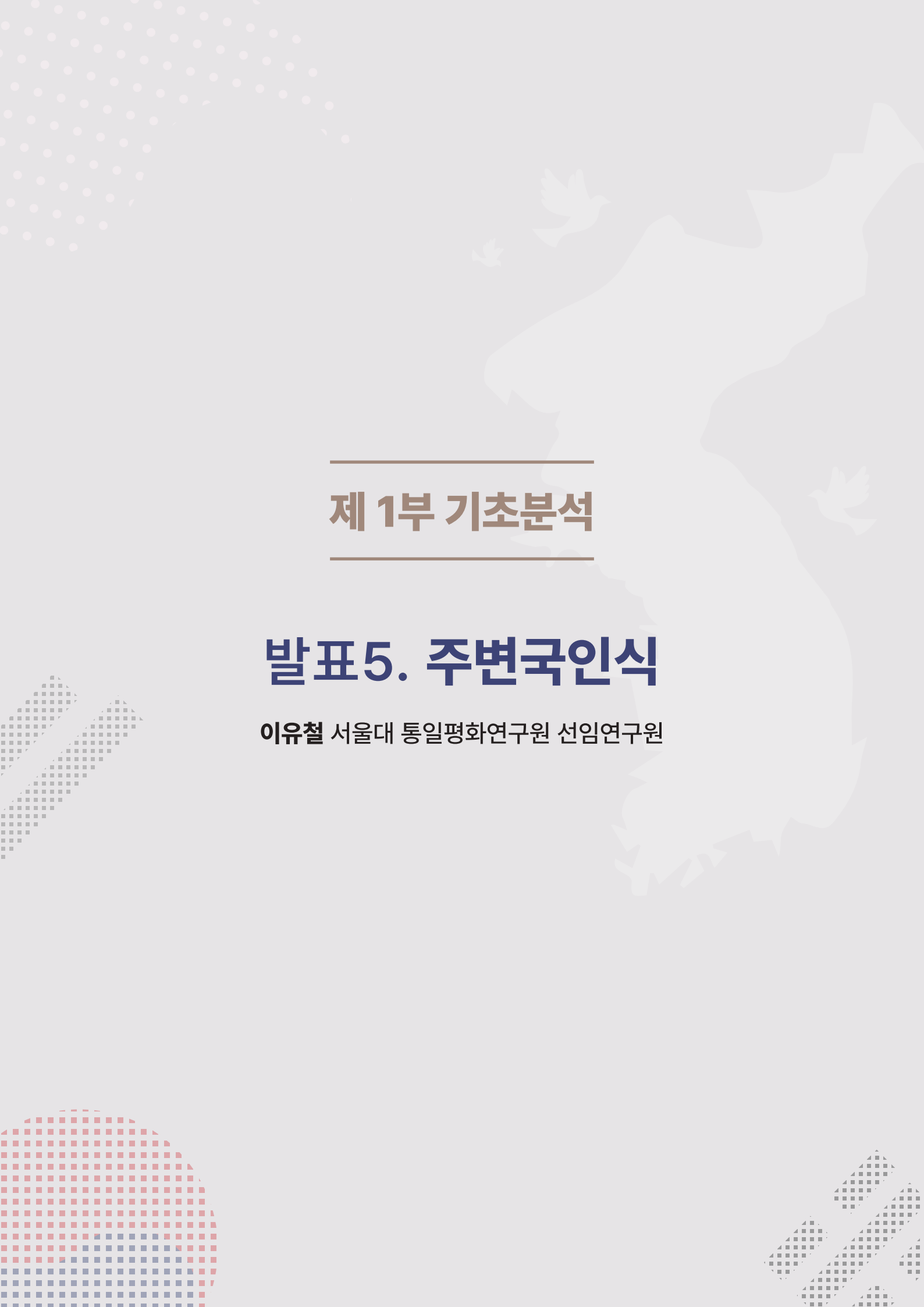
평화공존 목표 61.6%, 정부 만족 50.9%
넓은 목표 동의와 개별 수단·사업에 대한 판단은 구분

02 2026년에 특히 주목할 변화

핵무장 찬성 61.1%로 종전 최고치 상회
경제협력의 개혁개방·비핵화 효과 인식 격차 확대

03 집단별 차이와 정책 설명의 과제

19~29세와 중도층의 태도도 현안마다 다르게 나타남
정책의 목표, 추진 조건, 기대 성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gray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op left corner, there is a cluster of small white dots. Three white doves are depicted in flight across the map. The bottom left corner contains a circular pattern of red and blue dots, and the bottom right corner features a stylized geometric pattern of black and white squares.

제 1부 기초분석

발표5. 주변국인식

이유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2026 통일외교조사

주변관계인식 (요약)

이유철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친밀국과 위협국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으로는 압도적으로 미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본 조사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향성이다. 다만, 80%를 넘긴 2022년(80.6%), 2023년(82.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71.9%를 기록하며 2024년(79.9), 2025년(76.3) 연속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는 일본 13.4%, 북한 11.2%, 중국 3.7%, 러시아 0.6% 순으로 나타났다. 눈 여겨 볼 지점은 본 조사 시작 이래 일본에 대한 친밀도 척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본의 친밀도가 가장 높았던 것은 2007년 첫 조사 당시 11.6%였다.

위협적인 국가

한국인은 주변국들 가운데 북한을 가장 위협적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시작 이래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경향과 같으며 2026년에는 47.0%로 2016년(66.7%), 2017년(63.7%)에 비해 위협인식이 가장 높았던 시기와 비교하면 낮지만, 최근 2023년 47.5%, 2024년 50.9%, 2025년 42.1%와 비교하면 1~2년 사이에 상당히 하락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뒤이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으로는 중국 32.2%, 러시아 7.1%, 일본 6.9%, 미국 6.9% 순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에 대한 친밀도 상승과 반비례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서의 일본이 20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인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72.2%의 사람들이 북한의 위협이 심각하다고 바라 본 반면, 북한의 위협이 과장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27.8%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과 매우 과장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각각 13.2%, 1.1%로 압도적으로 북한 위협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 반면, 26.9%만이 정부의 대북 정책이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과반 이상인, 57.3% 사람들이 국내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편이라고 인식했다. 15.8%만이 국내 정치 경제적 문제를 덮기 위해 과도하게 대응한다고 생각했다.

2.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미국

한국인의 절대적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래 80%를 넘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해 왔으며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80.9%를 기록했다. 그러나 최근 10년만에 2015년(79.9%) 이래 2026년 처음으로 76.4%를 기록하며 80%대 이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하락폭은 역대 가장 큰 4.5%의 하락을 보였다. 이

러한 경향성은 경쟁(14.4%) 및 경계(8.9%) 대상으로 인식하는 수치에서도 나타나는데, 경쟁대상으로서의 인식은 11년 전 2015년 15.3% 기록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편, 한반도 전쟁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인식은 조사 시작 이래 2007년(50.7%), 2008년(57.4%)를 제외하고는 2026년 61.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년 대비 9.3% 하락한 것으로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다. 이에 반해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라는 인식은 2010년 조사 당시 23%를 기록한 이래 처음으로 30%를 넘겨 34.4%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가장 큰 폭의 증가(8.8%)이다.

일본

한국인들은 일본에 대해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조사결과 43.5%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했다. 특이한 점은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한 비율인데, 이번 2026년 조사결과 35.9%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저년대비 10.7%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따라 경계(17.6%) 및 적대(3.1%)대상의 비율은 가장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한반도 전쟁시 일본이 한국을 도울거라는 인식이 직전 연도인 2025년 22.1% 역대 최고치에 이어 올해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인 21.7%를 기록했다. 반대로 여전히 자국 이익에 따를 것이라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역대 최저치인 62.1%를 기록했고,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인식 또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12.3%를 기록했다.

중국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경쟁대상과 경계대상 비율이 역전된 이래 지속된 경향성은 2026년 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41%가 경계대상으로 인식했으며 경쟁대상이라는 답변(24.4%) 보다 높았다. 다만 눈 여겨 볼 만한 변화는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지난 2017년(26.6%) 이래 2026년이 22.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편, 중국을 적대 대상으로 바라보는 비율은 11.8%로 나타났다.

러시아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쟁과 경계대상 비율이 역전된 이래, 2026년까지도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의 53.3%가 러시아를 경계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19.7%)에 비해 두 배 넘게 높은 수치이다. 다만 이는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24년 16.2%였다. 더불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적대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꾸준히 10%대를 넘고 있으며, 올해는 12.7%를 기록했다. 흥미로운 지점은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는 비율은 거꾸로 2024년 6.6%에서 2026년 14.2%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반도 전쟁시 러시아가 북한을 도울 것(44.8%)이라고 보기보다 자국 이익에 따를 것(45.6%)이라고 보았다. 이는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인식이 지난 꾸준 증가한 결과 2025년에는 자국 이익에 따를 것(41.0%)이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역전(51.3%)했던 것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주변국의 통일희망 정도

주변국들 중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할 것으로 보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이 통일을 원할 것이라는 입장은 24.7%를 기록한 가운데,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두 배가 넘는 79.7%를 기록했다. 한편 일본(20.3%)과 중국(9.2%), 러시아(7.8%)도 한반도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답변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낮았다.

주변국에 대한 통일의 협조 필요성

주변국들의 통일희망 정도에 대한 부정적 경향성과 달리 주변국들의 한반도 통일 협조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필요성은 93.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인 가운데, 중국(78.3%), 러시아(75.8%) 일본(75.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주변국과의 협력

통일: 남북, 한미, 한중

“남북한 통일을 위해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26년 조사에서는 한미 간 협력(29.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북 간 협력(20.4%) 그리고 한중 간 협력(3.7%)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북간 협력의 중요성이 조사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만 모두 중요하다는 답변비율이 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핵화: 한미, 한중, 한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 필요 정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96.8%로 압도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한중 간 협력과 한일 간 협력이 각각 88.8%, 80.7%로 뒤 따랐다. 이러한 수치들은 이전 조사결과와 큰 차이 없이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핵 공격 개시 시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북한 핵 공격 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도 이전 조사의 경향성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에 대한 긍정 비율은 75.4%로 2025년 84.2%와 비교해 10%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 답변은 16.9%로 조사 시작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데 반면, 미국의 군사적 조치에 부정적 입장은 24.5%를 기록하며 조사 시작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4. 미중경쟁과 한반도

중국 부상에 대한 인식

중국의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이 되지도 안되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이 49.6%로 4년 연속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35.5%, 도움이 안될 것인다는 14.9%로 나타났다.

미중 갈등심화 시 한국의 입장

최근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7.5%의 사람들이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이 37.8%로 나타나,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 4.7%를 압도했다.

북중/북러 협력에 대한 인식

북중 협력과 북러 협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북중 협력의 경우, ‘우려스럽다’고 답한 비율이 76%, 북러 협력의 경우, 80.1%로 긍정적 입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2026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의 하락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셋째, 일본에 대한 적대적 인식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친밀도와 협력관계 인식 또한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넷째,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하락하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자국 이익 추구나 중립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미중 갈등 및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등의 불확실한 냉전적 질서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한미 동맹 중심 외교에서 국민들의 외교 다변화 필요성과 전략적 균형에 대한 지지로 이해할 수 있겠다.

통일의식조사 2026

한국인의 주변국 관계 인식

친밀·위협 인식, 미·중·일·러에 대한 태도, 통일과 미중경쟁

이유철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2026

CONTENTS

발표 구성

0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와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

02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미국·일본·중국·러시아: 협력/경쟁/경계/적대

0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통일 희망 정도와 협조 필요성

04

주변국과의 협력

통일·비핵화를 위한 협력,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05

미중경쟁과 한반도

중국의 부상, 미중 갈등, 북중·북러 협력

0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국가: 미국 우위, 그러나 하락

71.9%

미국

13.4%

일본

11.2%

북한

3.7%

중국

0.6%

러시아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3

● 미국 1위는 유지, 3년 연속 하락

2023년 82.1% → 2024년 79.9% → 2025년 76.3% → 2026년 71.9%. 2022년(80.6%)·2023년 정점 이후 뚜렷한 하락 곡선.

● 일본, 조사 이래 최고치

13.4%로 종전 최고였던 2007년 첫 조사(11.6%)를 넘어섰다.

0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는 국가: 북한, 그 뒤를 중국

47.0%

북한

32.2%

중국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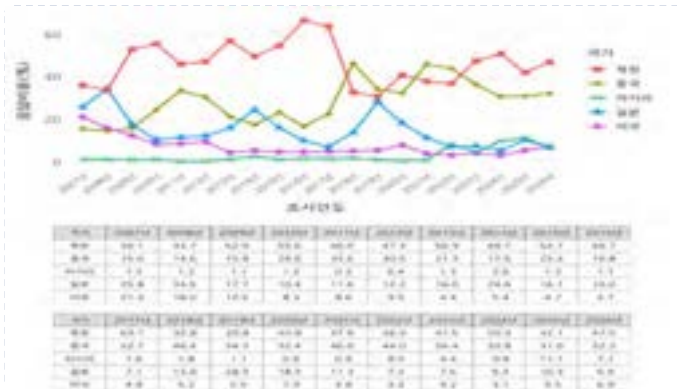
러시아

6.9%

일본

6.9%

미국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4

● 북한 위협 인식은 정점 대비 낮은 수준

2016년 66.7%, 2017년 63.7%의 고점과 비교하면 낮다. 최근 흐름은 2023년 47.5%, 2024년 50.9%, 2025년 42.1%, 2026년 47.0%.

● 일본 위협 인식, 20년 중 최저

친밀도 상승과 반비례해 한반도 평화의 위협국으로서 일본을 꼽는 비율이 조사 이래 가장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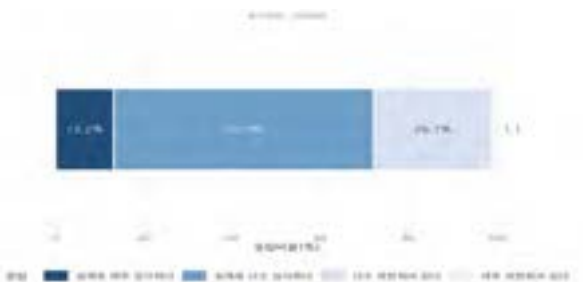
01 주변국에 대한 이미지

북한 위협의 성격과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의 위협은 심각한가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매우 심각하다’ 13.2% 대 ‘매우 과장되었다’ 1.1% — 강도에서도 위협 인식이 압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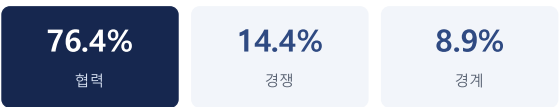


위협은 심각하다고 보면서도, 정부 대응은 원칙보다 국내 상황에 따라 조절된다고 본다.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2026)

02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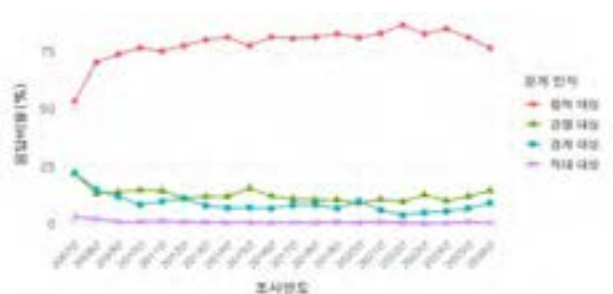
미국: 압도적 협력 대상, 그러나 10년 만에 80% 붕괴



● 2015년 이후 처음 80% 아래로
2016년 이래 80%를 넘겨온 협력 인식이 76.4%로, 2015년(79.9%) 이후 처음 80% 아래로 내려왔다.

● 전년 대비 -4.5%p, 역대 최대 낙폭
하락폭 자체가 조사 이래 가장 컸다.

● 경쟁 대상 인식은 11년 만의 최고
14.4%로, 2015년 15.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협력 대상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6.4
경쟁 대상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4.4
경계 대상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9.2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협력 대상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9.9	76.4
경쟁 대상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5.3	14.4
경계 대상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5.8	9.2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2026)

02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미국: 한반도 전쟁 시 한국을 도울 것인가

61.2%

한국을 도울 것

34.4%

자국 이익에 따를 것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7

● 지원 기대, 사실상 역대 최저

61.2%는 2007년(50.7%)·2008년(57.4%)을 제외하면 조사 이래 가장 낮다. 전년 대비 -9.3%p로 낙폭도 최대.

● '자국 이익 우선' 처음 30%대 돌파

34.4%. 2010년 23% 이후 처음 30%를 넘었고, 증가폭(+8.8%p)도 역대 최대다.

02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일본: 경쟁 대상이되, 협력 인식은 조사 이래 최고

43.5%

경쟁

35.9%

협력

17.6%

경계

3.1%

적대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8

● 협력 35.9%, 전년 대비 +10.7%p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 반대로 경계(17.6%)와 적대(3.1%)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전쟁 시 지원 기대 21.7%

역대 최고였던 2025년(22.1%)에 이은 두 번째 수치. '자국 이익'은 역대 최저인 62.1%, '중립'은 역대 최고인 12.3%.

02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중국: 경계 대상 기조 지속, 협력 인식은 소폭 회복

41.0%

경계

24.4%

경쟁

22.8%

협력

2017년 역전 구도가 그대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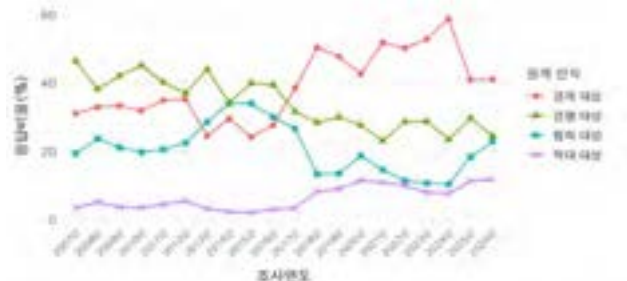
경쟁과 경계 비율이 뒤바뀐 2017년 이후의 경향이 이어져, 경계가 경쟁을 크게 앞선다.

협력 인식은 2017년 이래 최고

22.8%로 2017년(26.6%) 이후 가장 높다.

적대 대상 인식 11.8%

경계 기조 속에서도 적대까지 보는 비율은 제한적이다.



인식/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경계 인식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경쟁 인식	35.0	34.0	33.0	32.0	31.0	30.0	29.0	28.0	27.0	26.0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협력 인식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적대 인식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인식/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경계 인식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경쟁 인식	35.0	34.0	33.0	32.0	31.0	30.0	29.0	28.0	27.0	26.0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협력 인식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적대 인식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2026)

9

02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

러시아: 경계 우위 속 협력·적대의 양극화

53.3%

경계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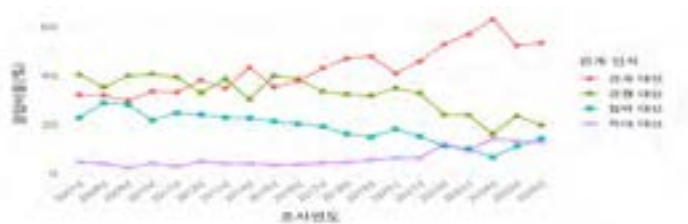
경쟁

14.2%

협력

12.7%

적대



인식/태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경계 인식	30.0	31.0	32.0	33.0	34.0	35.0	36.0	37.0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경쟁 인식	35.0	34.0	33.0	32.0	31.0	30.0	29.0	28.0	27.0	26.0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협력 인식	25.0	24.0	23.0	22.0	21.0	20.0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6.0
적대 인식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21.0	22.0	23.0	24.0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2026)

10

협력과 적대가 동시에 증가

협력은 2024년 6.6%에서 2026년 14.2%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적대 인식도 10%대를 유지해 올해 12.7%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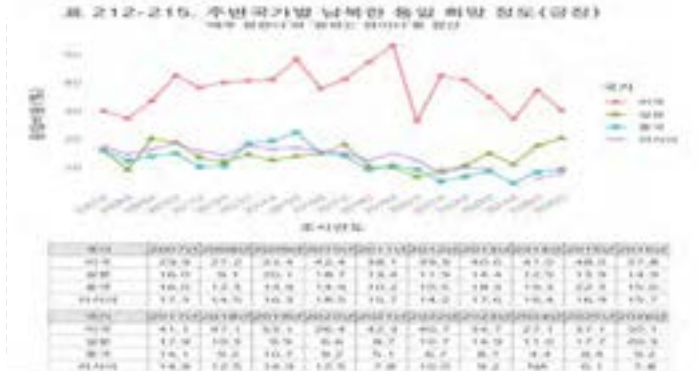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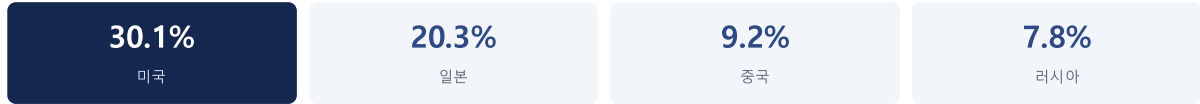
전쟁 시 '북한 지원' 기대가 다시 후퇴

자국 이익 45.6% 대 북한 지원 44.8%. 2025년 북한 지원(51.3%)이 자국 이익(41.0%)을 처음 앞섰던 흐름이 되돌아왔다.

03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주변국은 한반도 통일을 원할 것인가

‘통일을 원할 것이다’ 응답 비율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11

● 네 나라 모두 부정적 인식이 우세

가장 높은 미국조차 24.7%에 그쳤고,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9.7%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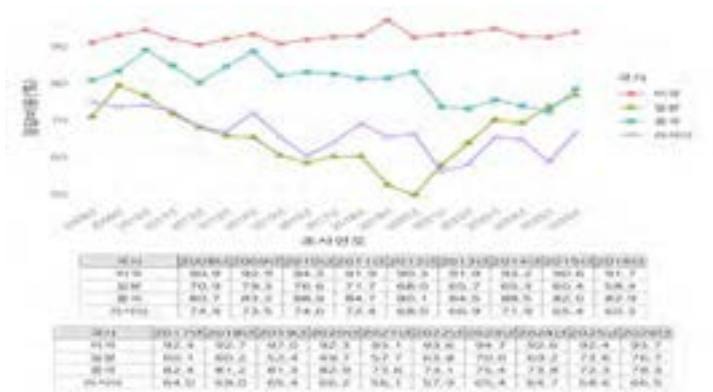
● 중국·러시아는 한 자릿수

통일을 희망할 것이라는 기대가 9.2%, 7.8%로 특히 낮다.

03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그럼에도 협조는 필요하다: 기대와 필요의 분리

‘통일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 응답 비율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12

● 희망 정도와 정반대의 구도

주변국이 통일을 원하지 않으리라 보면서도, 통일에는 그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한다.

● 미국은 압도적 93.7%

중국·러시아·일본도 모두 75%를 넘겨, 협조 필요성에서 는 국가 간 편차가 크지 않다.

04 주변국과의 협력

통일을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남북 협력의 후퇴

41.9%

모두 중요

29.4%

한미

20.4%

남북

한미 협력이 남북 협력을 앞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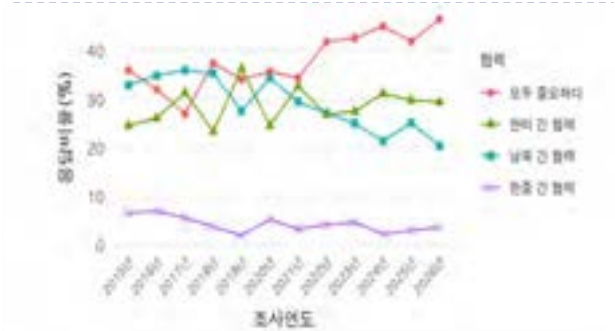
한미 간 협력 29.4%, 남북 간 협력 20.4%, 한중 간 협력 3.7% 순.

남북 협력, 조사 이래 최저

통일의 핵심 경로로 남북 관계를 지목하는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장 많은 답은 '모두 중요'

41.9%로 단일 항목 중 최다. 경로를 하나로 좁히지 않으려는 태도가 읽힌다.



협력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모두 중요하다	36.0	32.0	27.0	31.4	34.1	35.7	34.4	41.8	42.6	45.0	41.9	46.5
한미 간 협력	24.8	26.1	31.4	23.4	26.3	24.6	32.7	26.9	27.5	31.2	29.8	29.4
남북 간 협력	32.8	34.9	36.0	35.3	27.6	34.4	29.5	27.1	25.1	21.4	25.2	20.4
한중 간 협력	6.6	7.0	5.6	9.8	2.0	5.3	3.3	4.2	4.7	2.3	3.0	3.7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13

04 주변국과의 협력

비핵화 협력의 필요성과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강화 필요

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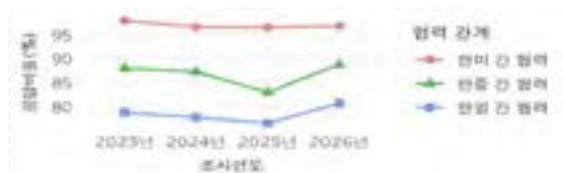
한미

88.8%

한중

80.7%

한일



협력 관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한미 간 협력	97.9	96.6	96.5	96.8
한중 간 협력	88.0	87.3	83.0	88.8
한일 간 협력	78.8	77.8	76.6	80.7

세 축 모두 80%를 넘으며, 이전 조사와 큰 차이 없는 안정적 경향을 보인다.

북핵 공격 시 미국의 군사조치 가능성

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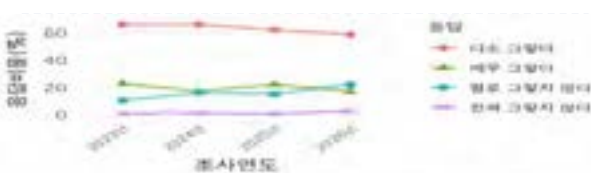
긍정

16.9%

'매우 그렇다'

24.5%

부정



응답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다소 그렇다	45.9	44.0	42.9	38.5
매우 그렇다	22.2	27.0	22.9	16.9
별로 그렇지 않다	19.5	16.0	19.9	22.0
전혀 그렇지 않다	12.4	1.0	14.3	22.6

2025년 84.2% 내비 10%p 가까이 하락. '매우 그렇다'는 역대 최저, 무응답은 역대 최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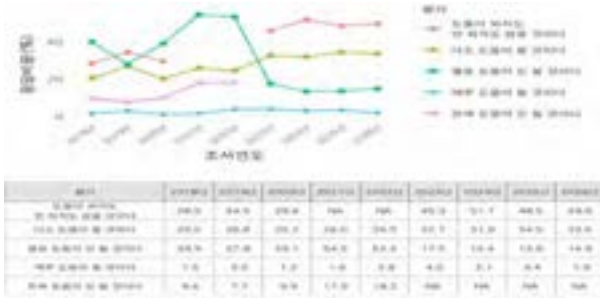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14

05 미중경쟁과 한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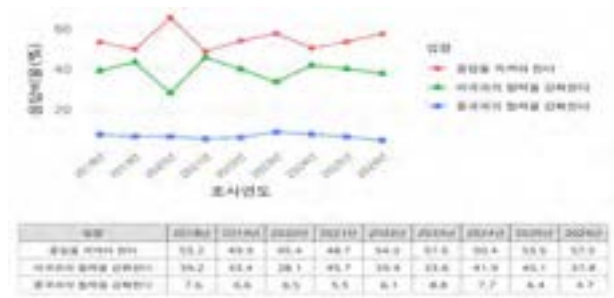
중국의 부상, 그리고 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선택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



‘도움이 되지도 안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유보적 답변이 4년 연속 가장 높다.

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



과반이 중립을 택했고, 중국과의 협력 강화는 5%에도 미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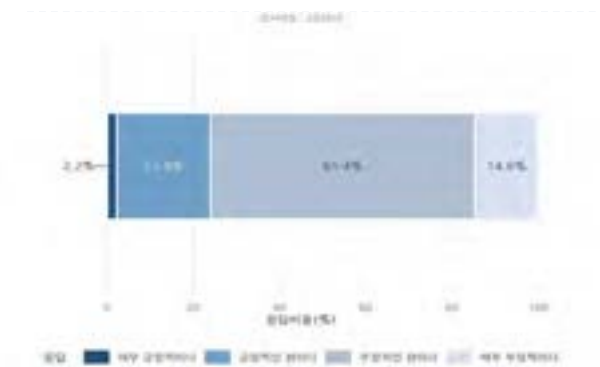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15

05 미중경쟁과 한반도

북중·북러 협력에 대한 인식: 압도적 우려

‘우려스럽다’ 응답 비율



자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26)

16



결론

2026년 조사가 보여주는 다섯 가지 특징

01 한미 협력의 압도적 우위는 유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협력 협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여전히 압도적이다.

02 그러나 미국에 대한 긍정 인식은 뚜렷한 하락세

협력 대상 인식, 전쟁 시 지원 기대, 군사조치 가능성 모두 동시에 후퇴했다.

03 일본에 대한 적대 인식은 조사 이래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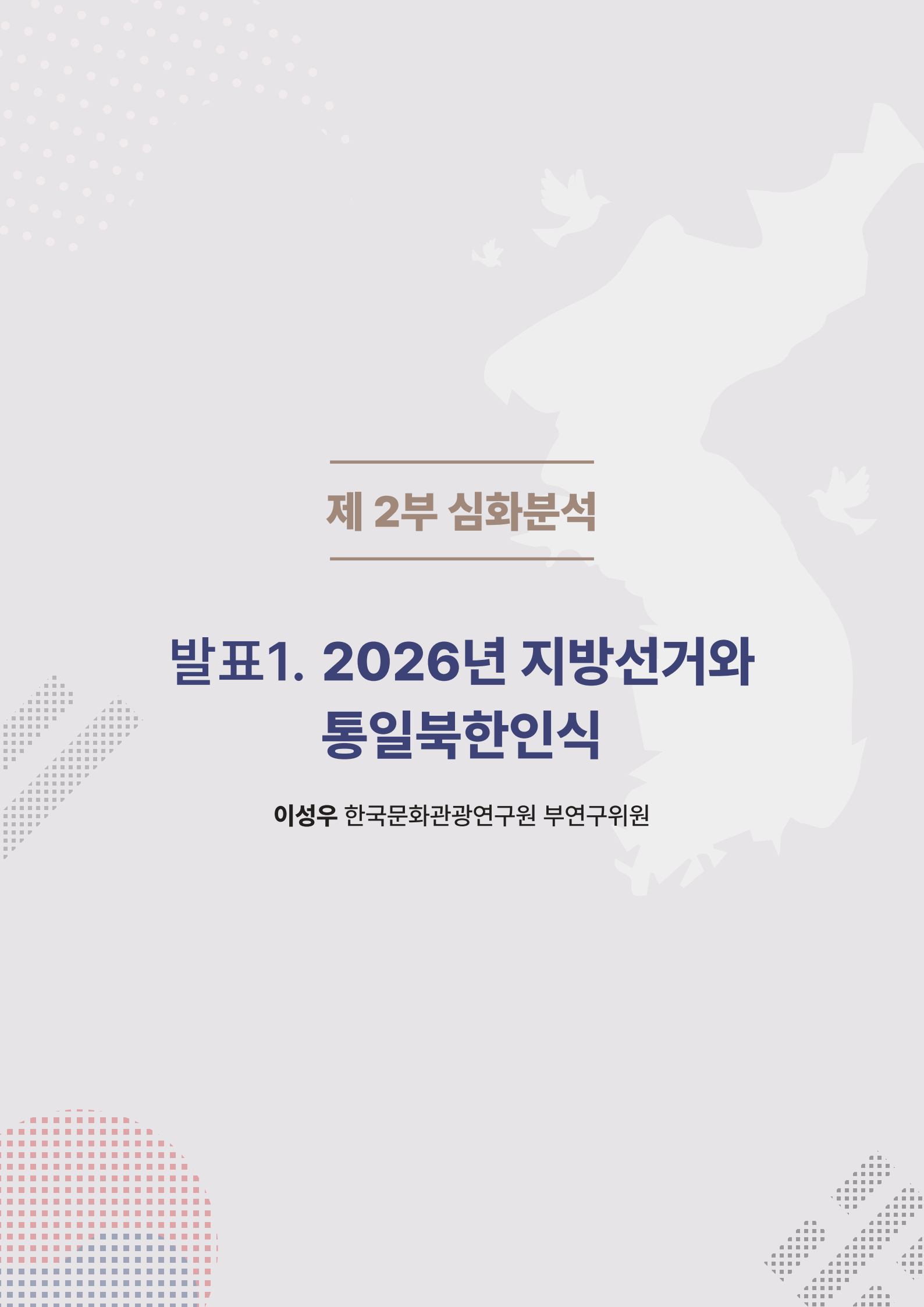
친밀도와 협력 관계 인식은 반대로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04 자국 이익과 중립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미중 갈등과 미국 우선주의가 만든 불확실한 신냉전적 질서에 대한 반응으로 읽힌다.

05 외교 다변화와 전략적 균형에 대한 지지

한미 동맹 중심 외교로부터의 조정 요구가 여론 수준에서 확인된다.

The background features a light gray map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top left corner, there is a cluster of small white dots. Three white doves are depicted in flight across the map. The bottom left corner contains a circular pattern of red and blue dots, and the bottom right corner has a pattern of gray dots.

제 2부 심화분석

발표1. 2026년 지방선거와 통일북한인식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026 통일인식조사

2026년 지방선거와 통일북한인식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통일북한인식이 2026년 지방선거 투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2025년 대통령선거 결과와 비교분석하였음. 2024년 총선에서 통일북한인식이 투표선택에 유의미하지 않았고, 2025년 대선에서는 유의미했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권2년차 지방선거에서 이 경향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대통령 직무평가와 정당지지가 통일북한인식에 정치적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음

○ 정치적 양극화의 고착화

- 민주주의 운영평가와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나타난 진보-보수 간 인식 역전(2025년 정권교체 이후)이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정치적 양극화는 정권 교체 이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임

○ 통일북한인식의 정치적 효력은 정당일체감을 경유한 간접효과에 가까움

- 정당지지·대통령직무평가를 통제하면 통일필요성·대북인식 등 통일북한인식 변수들의 개별 효과가 대부분 흡수되고 있음. 다만 이를 '효과가 사라진다'고 단순화하기보다, 매개효과 분해(KHB) 결과 대북인식(지원대상·협력대상) 효과의 약 70~73%, 통일필요성 효과의 약 50%가 정당지지·대통령평가를 매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대선과 지선에서 통일필요성의 작동 방향이 다름

- 2025년 대선에서는 통일필요성이 높을수록 이재명 투표확률이 상승했지만(43.7%→62.2%), 2026년 지선에서는 정당지지를 통제한 뒤 그 기울기가 거의 사라졌음(48.4%→46.7%). 정권교체가 걸린 대선에서는 통일 자체에 대한 태도가 강하게 작동하고, 지방선거에서는 그 힘이 약화됨을 확인하였음

○ 대통령 직무평가가 투표선택을 갈장힘

- 정당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대통령 직무평가가 1점(매우 잘못)에서 4점(매우 잘함)으로 이동하면 민주당 투표확률이 31.5%에서 60.8%로 상승한다(국민의힘은 반대로 42.1%→16.5%). 표본평균(AAP)과 평균적인 사람(MEM) 두 방식 모두에서 이 패턴이 확인되어 결과의 강건성이 뒷받침함

○ 정당일체감이 이념성향보다 강한 투표 예측변수임

- 정당지지층의 실제 투표 일관성(민주당 지지 94.8%가 실제 민주당 투표, 국민의힘 지지

89.7%가 실제 국민의힘 투표)이 이념성향에 따른 투표 일관성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음

○ 정책태도는 무당파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음

- 통일필요성의 효과 방향이 정당지지층(하락)과 무당파층(상승)에서 반대로 나타났음. 상호 작용항 자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표본 244명의 한계), 방향은 '약한 정당일체감을 가진 유권자일수록 정책으로 투표한다'는 이론과 부합함

○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은 정치참여 자체로부터의 이탈로 이어짐

- 대북정책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기권·무당파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졌음. 이는 정책 불만이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니라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함의

- 본 분석은 통일북한인식이 여전히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고리는 정권 교체가 걸린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 지방선거에서는 정당일체감·국정운영평가라는 필터를 거쳐 간접적으로만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통일·대북정책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독자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를 설명함. 다만 무당파·부동층에서는 정책태도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 집단을 겨냥한 정책 소통이 여전히 유효할 수 있음

2026년 지방선거와 통일북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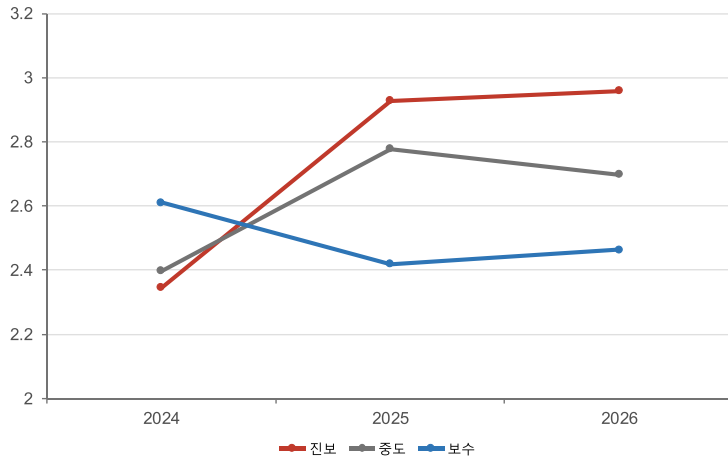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성우

주요내용

1. 정치성향별 민주주의운영평가
2.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3. 지지정당별·정치성향별 2026 지선 투표선택
4. 회귀분석: 정치성향에 미치는 통일북한인식
5. 회귀분석: 2026년 지방선거 투표정당 선택
6. 회귀분석: 2026 지선(민주당) vs 2025 대선(이재명)
7. 예측확률: 대통령 직무평가 수준별 투표확률
8. 예측확률: 통일필요성 수준별
9. 예측확률: AAP vs MEM 비교
10. 정당지지 강도(무당파) × 통일필요성
11. 기권·무당파 결정요인 모델
12. 매개효과 분해 (간이 KHB)

1. 정치성향별 민주주의운영평가

2024~2026



핵심 포인트

2024년 최저점 이후 2025년 정권교체로 역전

2026년에도 그 구도가 그대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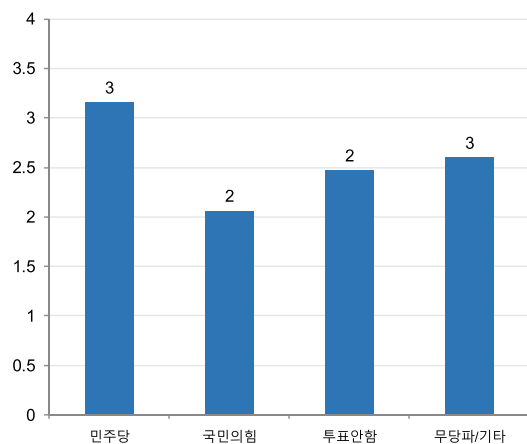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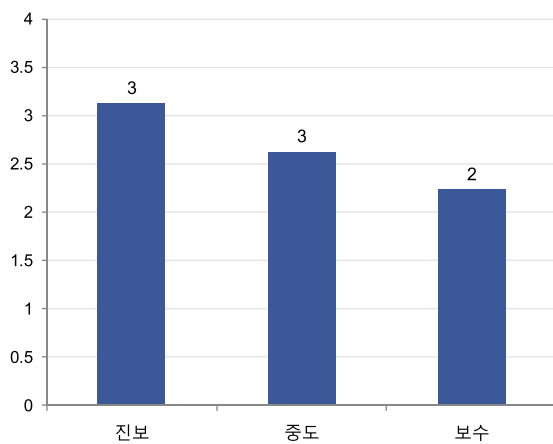
정치적 양극화가 정권 2년차까지 고착화

2026 통일의식조사 심화분석

3

2. 2026년 이재명 대통령 직무평가

이념성향별 · 정당선택별



정당선택(2026 지선투표)별 직무평가가 이념성향별 격차보다 더 뚜렷 — 실제 투표행위가 이념보다 직무평가와 더 밀접

2026 통일의식조사 심화분석

4

3. 지지정당별·정치성향별 2026 지선 투표선택

투표 일관성 비교

구분	민주당 투표율(%)	국민의힘 투표율(%)
민주당 지지층	94.8	0.9
국민의힘 지지층	4.7	89.7
진보성향	78.7	9.8
보수성향	17.6	68.6

핵심 발견

정당지지층 투표 일관성 94~95%

이념성향 투표 일관성 68~79%

→ 정당일체감이 이념보다 더 강한 투표 예측변수

2026 통일인식조사 심화분석

5

4. 회귀분석: 정치성향에 미치는 통일북한인식

종속 변수: 진보/중도/보수 (2026)

변수	진보	중도	보수
통일필요성	0.131*	-0.114*	0.067
대북인식_지원대상	0.039	0.143	-0.378
대북정책목적_통일	0.434+	-0.173	-0.335
대북정책목적_평화공존	0.36+	-0.313*	0.079
대통령직무평가(2026)	0.596***	-0.207+	-0.265*
정당지지_민주당	1.59***	-1.252***	-0.669*
정당지지_국민의힘	-0.192	-1.75***	2.131***

해석

정당지지·대통령평가를 통제해도

대북인식·대북정책목적의

일부 효과가 유지됨

→ 정책태도의 잔여 설명력 존재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2026 통일인식조사 심화분석

6

5. 회귀분석: 2026년 지방선거 투표정당 선택

종속 변수: 민주당/국민의힘 투표

변수	민주당 투표	국민의힘 투표
통일필요성	-0.067	0.219*
대북인식_지원대상	0.443	-0.585
대북인식_협력대상	0.149	-0.568
대북정책목적_평화공존	-0.159	0.71*
대통령직무평가(2026)	1.054***	-1.216***
정당지지_민주당	4.402***	-1.939***
정당지지_국민의힘	-0.933**	4.123***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해석

정당지지·대통령평가 통제 시

통일북한인식 개별효과 대부분 소멸

단, 국민의힘 모델에서 통일필요성(+)은 유지

2026 통일의식조사 심화분석

7

6. 회귀분석: 2026 지선(민주당) vs 2025 대선(이재명)

변수	2025 대선 (이재명)	2026 지선 (민주당)
통일필요성	0.197***	-0.067
대북인식_지원대상	0.924***	0.443
대북인식_협력대상	0.58**	0.149
대북인식_경쟁대상	0.752**	-0.087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해석

2025년엔 통일필요성·대북인식

모두 강하게 유의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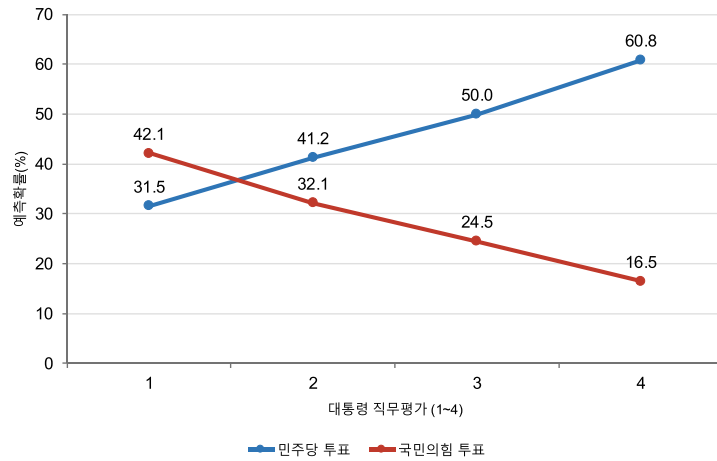
2026년(정당지지 통제 후)엔

대부분 유의성 소멸

2026 통일의식조사 심화분석

8

7. 예측확률: 대통령 직무평가 수준별 투표확률



정당지지 통제 후에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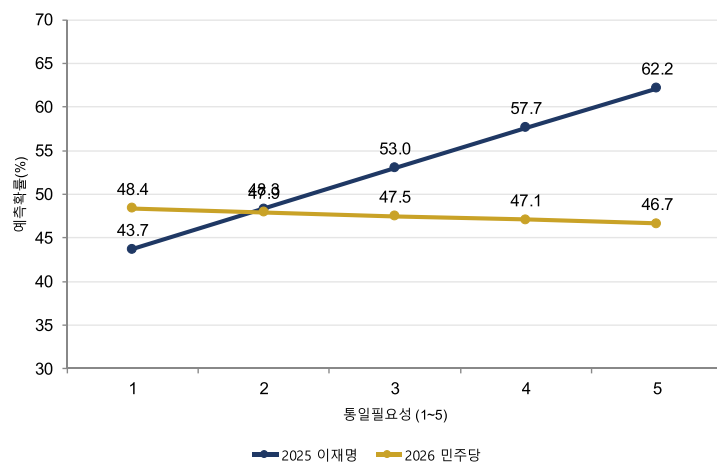
민주당 31.5%→60.8%

국민의힘 42.1%→16.5%

정당지지 미통제 시(3.5%→89.4%)보다 완만
— 효과의 상당부분이 정당지지와 중첩

8. 예측확률: 통일필요성 수준별

2025 대선 vs 2026 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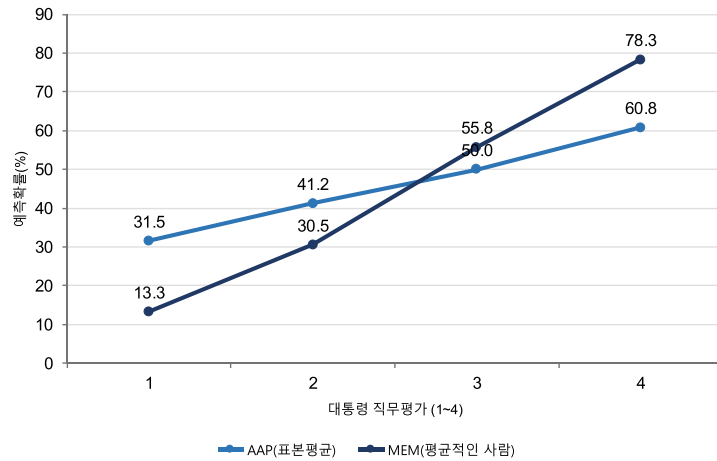
통제 후 '무력화'로 재해석

2025: 43.7%→62.2% (뚜렷한 상승)

2026: 48.4%→46.7% (거의 평평)

9. 예측확률: AAP vs MEM 비교

강건성 확인



방향은 일치, 크기는 차이

AAP: 31.5%→60.8%

MEM: 13.3%→78.3%

두 방식 모두 상승 방향은 동일 — MEM은 '평균적 응답자' 가정으로 변동폭이 더 크게 나타남

2026 통일의식조사 심화분석

11

10. 정당지지 강도(무당파) × 통일필요성

종속변수: 민주당/국민의힘 투표 (상호작용항 포함)

변수	민주당 투표	국민의힘 투표
통일필요성	-0.102	0.077
대북인식_지원대상	0.541*	-0.474
무당파	-1.987***	-2.385***
통일필요성×무당파	0.168	0.19
대통령직무평가	2.021***	-1.964***
이념_진보	1.002***	-0.72**
이념_보수	-1.06***	1.612***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해석

상호작용항은 비유의($p > 0.1$)

정당지지증 ↓ vs 무당파증 ↑

(통일필요성 높을수록)

2026 통일의식조사 심화분석

12

11. 기권·무당파 결정요인 모델

종속 변수: 기권 여부 / 무당파 여부

변수	기권	무당파
통일필요성	0.045	0.115+
대북인식_지원대상	-0.983*	-1.362***
대북정책만족도	0.082	-0.196
대북정책도움정도	-0.376+	-0.477**
대통령직무평가	-0.228	-0.343**
이념_진보	-1.085***	-1.401***
이념_보수	-0.898**	-1.44***

*** $p < 0.001$, ** $p < 0.01$, * $p < 0.05$, + $p < 0.1$

해석

대북정책도움정도가
낮을수록 기권·무당파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
→ 정책무력감이 이탈로 이어짐

2026 통일의회조사 심화분석

14

12. 매개효과 분해 (간이 KHB)

정당지지·대통령평가에 의한 매개비율

변수	매개비율(%)
통일필요성	49.7%
대북인식_지원대상	69.9%
대북인식_협력대상	73.1%
대북정책목적_통일	50.4%

해석

대북인식(지원·협력대상)의 70~73%가
정당지지·대통령평가를 매개로 작동
통일필요성·대북정책목적_통일은
약 50% — 절반은 독립적으로 작동
→ '효과 소멸'이 아니라
'효과의 상당부분이 정당일체감 경유'

2026 통일의회조사 심화분석

17

13. 주요결론

1

정당지지·대통령평가 통제 시 통일북한인식의 개별효과 대부분 흡수 — 정당일체감을 경유한 간접효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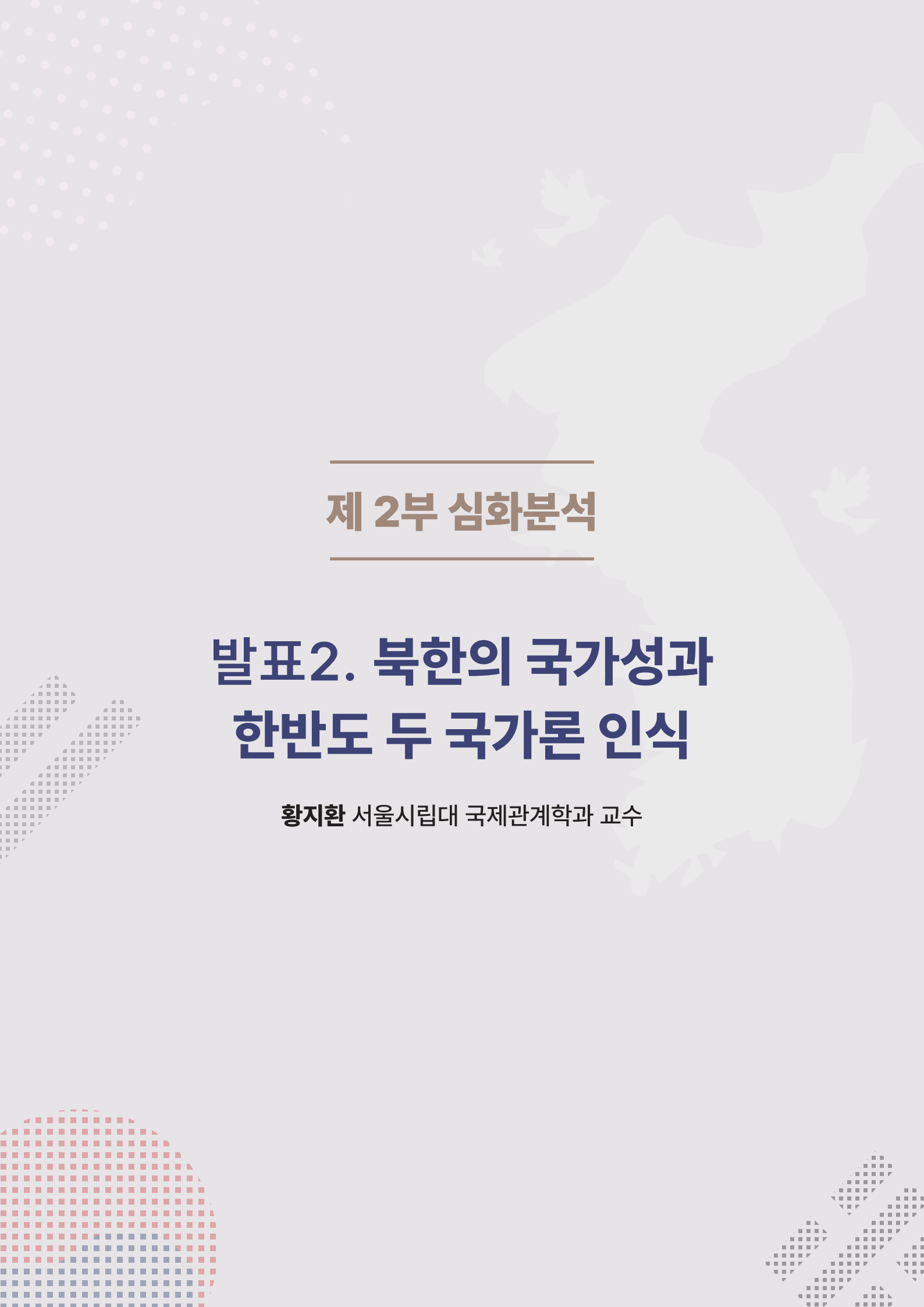
간이 KHB 분해: 대북인식 효과의 70~73%, 통일필요성 효과의 약 50%가 정당지지·대통령평가를 매개

3

무당파층에서는 통일필요성 효과 방향이 정당지지층과 반대(비유의) — 정책투표는 무당파에서 상대적으로 강함

4

대북정책 불만족(도움정도 지수 하락)은 기권·무당파 이탈을 유의하게 예측



제 2부 심화분석

발표2. 북한의 국가성과 한반도 두 국가론 인식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26 통일외교조사

북한의 국가성과 한반도 두 국가론 인식 (요약)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 배경: ‘통일 지향 특수관계’ vs. ‘두 국가 관계’

- 1991년 채택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 남북한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였음.
- 하지만, 북한은 2023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한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고 선언하였음.
- 이에 따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2026년 1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함에 결정하였음.
-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중앙위원회 10국’ (별칭: 대적지도국)으로 개편되었음.
- 2026년 수정된 새 헌법에서는 기존 헌법의 서문과 본문에 있던 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이라는 영토조항을 신설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공식 반영했음.

2. 북한의 국가성 인식

-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올해 응답자의 53.5%가 찬성하여 반대 16.2%를 압도하고 있음.
- 다만, 과반수가 북한이 국가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찬성한다” 9.7%, “다소 찬성한다” 43.8%로 비교적 소극적 인식이 강함을 보여줌.
- 2021년 이후 지난 5년간 큰 변화없이 50% 내외의 응답자들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인식하고 있어 (49.9%~56.5%),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 아님을 보여줌.

3. 북한정부의 합법성 인식

-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올해 응답자의 83.6%가 압도적으로 대한민국만이 합법정부라고 대답하였음.

- 이는 응답자들이 북한의 국가성은 인식하면서도 북한 정부의 합법성은 부정하는 경향이 강함을 보여줌.
- 동아시아연구원(EAI)이 2005년 이후 5년마다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올해 응답은 20년 내 가장 높은 응답이며, 동 기간 전반적인 상승세가 보임 (최소 2005년 58.9%)

4. 한반도 두 국가론 인식

-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가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올해 응답자의 81.8%가 한반도 두 국가를 인식하고 있었음.
- 다만, 압도적인 응답자가 두 국가를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렇다” 21.6%, “대체로 그렇다” 60.3%로 비교적 소극적 인정 비율이 훨씬 더 높음.
- 이는 북한의 국가성 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모습임.
-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조사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올해 응답은 2020년(90.2%)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응답임.
- 지난 20년 동안 응답자의 대부분(80% 내외)이 두 국가론 인정해 온 모습으로, 최근 북한의 두 국가론 이전에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두 국가론을 오랫동안 인식해 온 것으로 보임.

5. 대한민국의 영토성 인식

- “어디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올해 응답자의 60.8%가 현재의 남한 지역이라고 답변했으며, 한반도 전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28.3%에 불과함.
- 대한민국 영토성 인식 역시 북한의 국가성, 한반도 두 국가론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조사 내용과 비교해 볼 때, 2006년은 지난 20년 내 가장 높았으며, 2005년(25.8%)보다 2배 이상 상승한 응답임.
- 한반도 전체라는 응답은 2005년에 가장 높은 응답이었으나 (47.1%), 지난 20년 동안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5. 요약 및 함의

- 절반정도(53.5%)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있음.
- 대부분의 응답자들(81.8%)이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가”로 판단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83.6%)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하고 있음
- 점점 더 많은 응답자들이 대한민국 영토가 현재의 남한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들이 북한의 국가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 정부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모습임.

2026 통일의식조사

북한의 국가성과 한반도 두 국가론 인식

황지환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통일지향 특수관계’ vs. ‘두 국가’ 관계



북한의 국가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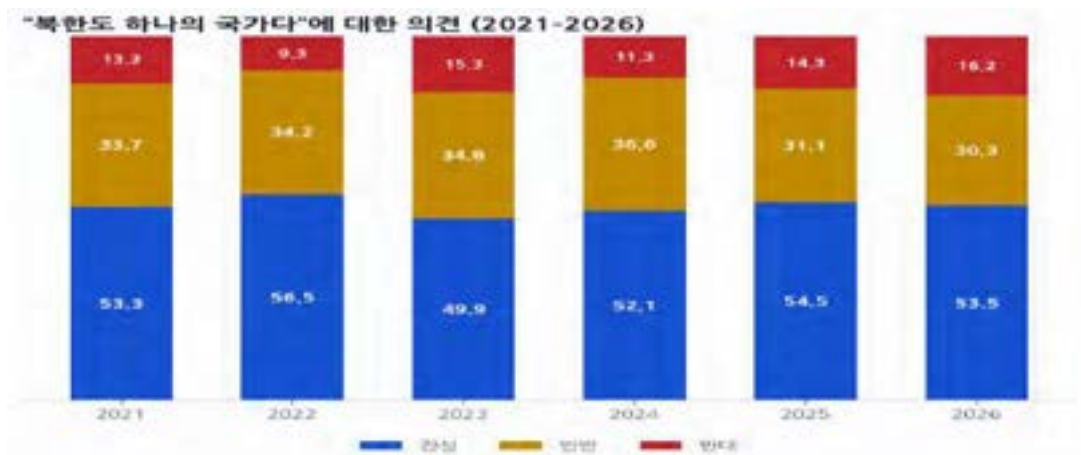
문) OO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 올해 응답자의 53.5%가 찬성했음.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반반/보통이 다	다소 반대한다	매우 반대한다	○ 국가성 보유 찬성	○ 반반/보통	○ 국가성 보유 반대	계
		사례수	%	%	%	%	%	%	%	%	%
■ 전 체 ■		(1200)	9.7	43.8	30.3	11.9	4.4	53.5	30.3	16.2	100.0
성별	남성	(607)	9.7	43.8	28.7	12.3	5.7	53.4	28.7	17.9	100.0
	여성	(593)	9.8	43.8	31.9	11.5	3.0	53.6	31.9	14.5	100.0
연령별	19~29세	(183)	7.1	43.0	34.9	8.8	6.1	50.2	34.9	14.9	100.0
	30대	(203)	9.3	40.0	31.8	15.0	4.0	49.3	31.8	18.9	100.0
	40대	(228)	9.6	43.8	30.8	12.0	3.9	53.4	30.8	15.9	100.0
	50대	(260)	11.0	47.6	27.3	10.4	3.7	58.6	27.3	14.1	100.0
	60대 이상	(326)	10.5	43.5	28.8	12.8	4.5	54.0	28.8	17.3	100.0

지난 5년간의 변화 추이

→ 지난 5년 동안 큰 변화없이 50% 내외의 지속적인 의견 보이고 있음.



북한정부의 합법성 인식

문)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이다.
→ 응답자의 83.6%가 대한민국만이 합법정부라고 대답했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계
		사례수	%	%	%	%	%	%	%
■ 전 체 ■		(1200)	32.5	51.0	14.7	1.7	83.6	16.4	100.0
성별	남성	(607)	33.6	50.3	14.5	1.5	83.9	16.1	100.0
	여성	(593)	31.5	51.8	14.8	2.0	83.3	16.7	100.0
연령별	19~29세	(183)	31.4	51.9	14.2	2.5	83.3	16.7	100.0
	30대	(203)	28.1	54.2	15.4	2.3	82.3	17.7	100.0
	40대	(228)	32.0	53.6	13.6	0.8	85.6	14.4	100.0
	50대	(260)	34.1	49.7	13.5	2.6	83.9	16.1	100.0
	60대 이상	(326)	35.1	47.8	16.1	0.9	83.0	17.0	100.0

지난 20여년간의 변화 추이

→ 지난 20년내 가장 높은 응답이며, 동 기간 전반적인 상승세가 보임.



한반도 두 국가론 인식

문)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가이다.

→ 응답자의 81.8%가 그렇다고 응답했음.

→ 다만, 적극적인 인정보다는 소극적인 인정 비율이 훨씬 더 높음.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다	○ 그렇지 않다	계
		사례수	%	%	%	%	%	%	%
■ 전체 ■		(1200)	21.6	60.3	15.5	2.6	81.8	18.2	100.0
성별	남성	(607)	21.5	59.9	15.8	2.9	81.4	18.6	100.0
	여성	(593)	21.7	60.7	15.2	2.4	82.3	17.7	100.0
연령별	19~29세	(183)	24.0	58.3	13.1	4.6	82.3	17.7	100.0
	30대	(203)	21.6	56.9	17.1	4.4	78.5	21.5	100.0
	40대	(228)	20.9	58.9	18.4	1.9	79.7	20.3	100.0
	50대	(260)	23.7	59.1	16.5	0.8	82.7	17.3	100.0
	60대 이상	(326)	19.0	65.4	13.2	2.4	84.4	15.6	100.0

지난 20여년간의 변화 추이

→ 2026년은 2020년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응답임.

→ 지난 20년 동안 응답자의 대부분(80% 내외)이 두 국가론 인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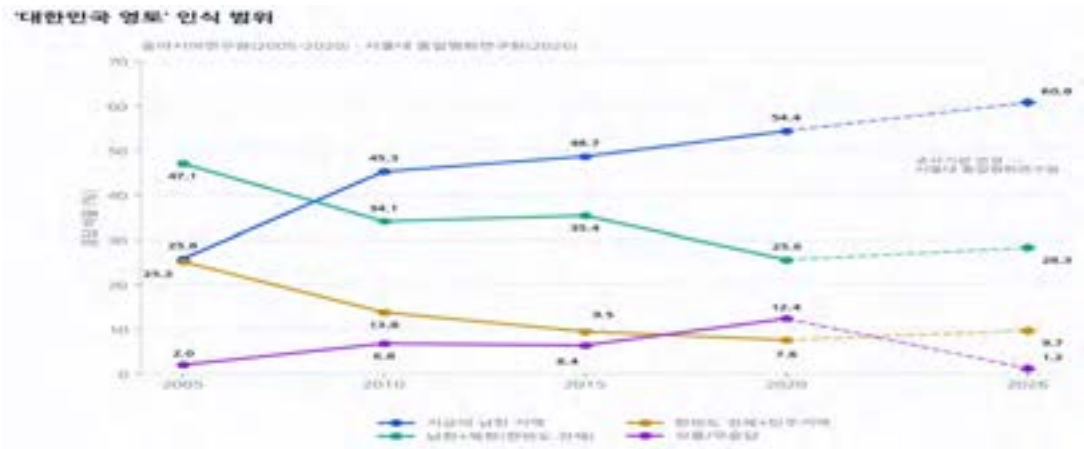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영토성 인식

문) 다음 중 어디까지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의 60.8%가 현재의 남한 지역이라고 답변함.
→ 한반도 전체라고 답변 응답자는 28.3%에 불과함.

		사례수	현재의 남한 지역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	한반도 전체와 만주지역	잘 모름	계
			%	%	%	%	%
■ 전 체 ■		(1200)	60.8	28.3	9.7	1.2	100.0
성별	남성	(607)	57.4	31.7	9.9	1.0	100.0
	여성	(593)	64.3	24.9	9.5	1.3	100.0
연령별	19~29세	(183)	60.8	30.9	7.1	1.2	100.0
	30대	(203)	64.5	26.3	7.4	1.7	100.0
	40대	(228)	63.9	26.9	8.3	0.9	100.0
	50대	(260)	60.3	26.5	12.3	1.0	100.0
	60대 이상	(326)	56.7	30.7	11.6	1.1	100.0

지난 20여년간의 변화 추이

→ 2006년은 지난 20년 내 가장 높으며, 2005년보다 2배 이상 상승함.
→ 한반도 전체라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북한의 국가성 및 한반도 두 국가론 인식

- 1) 절반정도(53.5%)의 응답자들이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고 있음.
- 2) 대부분의 응답자들(81.8%)이 “대한민국과 북한은 현실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국가”로 판단하고 있음.
- 3) 하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들(83.6%)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라고 생각함.
- 4) 이런 관점에서 점점 더 많은 응답자들이 대한민국 영토가 현재의 남한지역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제 2부 심화분석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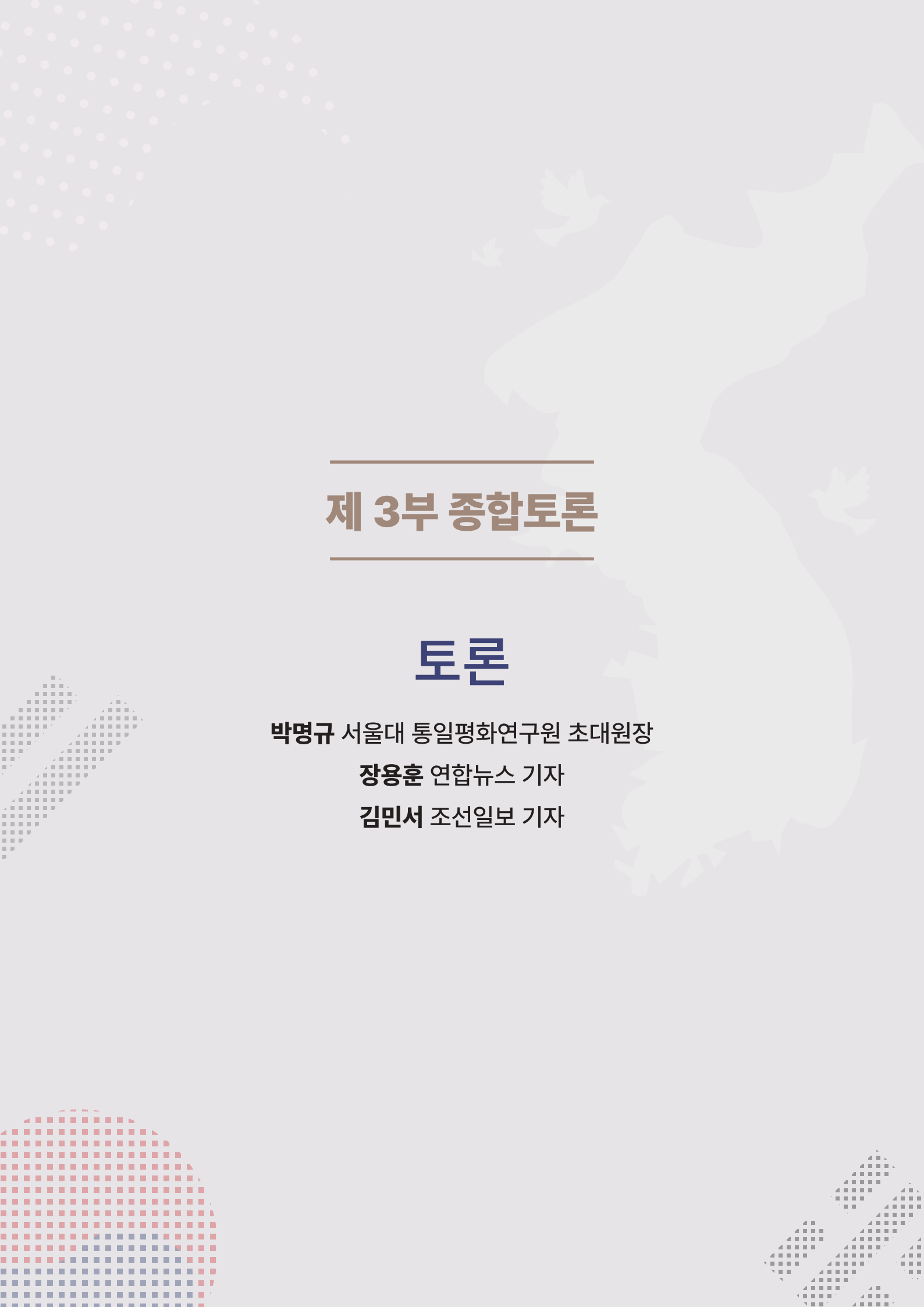
이선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필국 MBC 논설위원



MEMO

MEMO



제 3부 종합토론

토론

박명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초대원장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김민서 조선일보 기자

MEMO

MEMO